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15. 12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15. 12

KOICA

저자 약력¹⁾

김 지 현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
- 주요 연구
 - ▷ 2015,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pp.6-19)”,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pp.240-253)”,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22호/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개발과 이슈 1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4, “Aid Effectiveness and Fragmentation: Changes in Global Aid Architecture and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in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Beyond Aid*, Eun Mee Kim and Pil Ho Kim (ed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공저)

김 찬 유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주요 연구
 - ▷ 2015. Post-2015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데이터 혁명.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이 인 호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 중앙대학교대학원 북한학 석사(북한개발협력전공)

1) 저자는 가나다 순임.

조 한 슬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주요 연구

▷ 2015.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 2014.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산물 가공.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저)

▷ 2013. 다자기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멀티바이와 양자사업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2013.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개선방안.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조원

- 이연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 이영지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 요약	1
Executive Summary	7
I. 서론	12
II. 포용적 성장 논의	15
1. 성장과 재분배 논의	16
2. 친빈곤적 성장	19
3. 포용적 성장	22
4. 포용적 성장의 측정	28
III. 성장과 불평등의 실제	32
1. 개요	32
2. 콜롬비아 (중점협력국)	36
3. 페루 (중점협력국)	39
4. 볼리비아 (중점협력국)	42
5. 파라과이 (중점협력국)	45
6. 인도네시아 (중점협력국)	48
7. 베네수엘라	51
8. 브라질	54
9. 에콰도르	56
10. 칠레	58
11. 파나마	61
12. 벨라루스	64
13. 세르비아	67
14. 카자흐스탄	70

IV. 포용적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사례 분석	73
1. 브라질의 Pro Uni	73
2. 여성을 위한 양질의 고용창출	79
V. 결론	85
참고문헌	89

국문 요약

2015년 9월 UN 뉴욕 본부에서 2030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발표되었다. 2030 개발의제의 핵심 원칙들 중 하나는 ‘No one left behind (누구도 뒤쳐지지 않음)’으로써, 개발의 ‘포용성’을 주된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즉,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고 다양한 계층을 경제발전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아 정의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은 빈곤 계층의 삶 개선과 기회 향상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수반하며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포용적 성장의 의미가 정책 목적을 결정짓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된 정책 목표 역시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White (2012)가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책입안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정의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포용성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에 관한 강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성장주의의 상징인 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불평등,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포용적 성장의 주요 요소 중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발전(development)과 빈곤의 척도인 사회적 요인들은 대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포용적 파트너십 논의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결합양식을 전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1) 성장과 재분배 2) 친빈곤적 성장

3) 포용적 성장 4) 포용적 성장의 측정 문제 측면에서 논의 한 후 포용적 성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기회와 평등으로 정의하였다. 초기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의 성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결국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는 다시 성장을 지속하여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원을 키우면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빈곤층이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빈곤적 성장 (pro-poor growth)’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친빈곤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은 개념면에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성장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었던 친빈곤적 성장에 비해 포용적 성장은 빈곤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단기적인 GDP 또는 GDP per capita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섹터에서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지 하에서 경제 다각화를 위한 구조개혁 등의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포용성이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비즈니스와 개인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범적인 환경에서의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포용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Kakwani and Pernia (2000)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이 “혜택 공유 및 참여”를 의미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참여는 과정과 성과 두 가지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고용 비율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포용적 성장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성장의 성과 분배와 무관하지 않고, 이러한 성과의 분배가 결국은 참여기회에 영향을 주는 순환 논리를 인지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Ramos et al. (2013) 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참여의 관계에 주목하며, 포용성을 측정할 때, 이 두 측면에 대한 지표를 세분화함으로써 정의를 발전시켜왔다. 이익의 불합리한 공유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대표되며, 이는 친빈곤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었고, 고용률로서 참여를 측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속도와 방식 (pattern)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빈곤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함께 포용

적 성장 전략이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포용적 성장은 소득의 재분배 보다는 생산적 고용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단순히 고용비율을 증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졌는 지에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슈들은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고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우며, 완전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재고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정치적 권리 박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곤층이 직면한 문제는 경제적 수입의 격차 뿐 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소득적 요인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가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포용적 성장의 가장 큰 요소는 기회와 참여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확대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 불평등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취업, 교육, 의료 등 경제생활을 위한 진입조건에서의 차별구조)’과 진입 이후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 정도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수입과 재산 축적의 불평등)’으로 대별되는데, 사회적 약자 계층이 수용하기 어렵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는 진입조건에 해당하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이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중점도 결과적 불평등의 해결보다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 역시 포용적 성장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민중의 실질적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은 개별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기존의 GDP 또는 GDP per capita가 가구 (household) 중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에의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 측

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불평등이 실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시기인 14년 (2000년 - 2013년) 중 7년 이상의 값을 갖고 있는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에 따른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로는 GDP per capita를 활용하였으며, 불평등은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취학률(enrollment rate), 고용률 (employment rate)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소득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요소가 개선되지 않은 반면 인간개발지수는 상승하였다. 취학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을 포함한 전체 고용률이 상승되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페루는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이 감소되고 인간개발지수가 상승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져 이에 대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취학률이 하락하여 교육 기회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소득상승에 발맞추어 인간개발지수는 상승했으나 불평등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학생의 취학률이 더 크게 감소하여 교육 부문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라과이는 소득이 감소하면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취학률 및 고용률에서도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인간개발지수는 경제 성장과 함께 상승했으나, 지니계수는 하락했다. 교육 기회의 경우 남녀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고용의 기회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완화되었다. 반면 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했다. 브라질의 불평등, 인간개발지수, 여성의 고용률은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에콰도르에서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인간개발지수가 상승하고 지니계수는 하락하여 불평등이 완화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 및 고용적 측면에서 역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해소되었다. 칠레 역시 GDP 성장에 따라 인간개발지수 및 불평등은 개선되었으나, 교육 및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파나마

의 불평등 및 인간개발지수는 향상되었으나 취학률 및 고용률을 통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벨라루스의 경우, 인간개발지수는 증가했으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 여성에 불평등은 개선되었으나 고용적 측면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세르비아의 불평등 요소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인간개발지수는 상승하다가 최근 감소했다. 고용률의 격차는 개선되었으나, 남녀 대비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에 따라 불평등이 완화되고 인간개발지수 역시 상승되었다. 또한 취학률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거의 볼 수 없었고, 고용률에서는 격차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두 가지 중남미 국가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PPP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포용적 파트너십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브라질의 Pro Uni (University for all)다. 동 프로그램은 사립 대학교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기간동안 일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동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의 가계소득 증가 및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이수률을 핵심으로 하여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사례인 ‘여성을 위한 양질의 고용 창출’ 이니셔티브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코스타리카에서 처음 시행된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34개의 프로젝트 지원 네트워크가 창설되었으며, 파나마와 페루에도 도입되어 현재 이행 중에 있다. 두 사례조사는 포용적 성장달성을 위한 다양한 섹터 및 주체간의 포용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결론으로 포용적 성장이 실제 개발협력 사업에 반영위해서는 첫째, 포용적 성장을 보다 확장된 개념인 ‘포괄 섹터 이슈’로 인식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출물 중심이 아닌 영향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들의 결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소득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KOICA가 SDGs 5대 브랜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Better Life for Girls)’는 여아/소녀의 생애 주기형 복합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및 소득 수준 향상/재산권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포용적 성장을 SDGs 안에서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국이 국내 불평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은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포용적 성장 지원전략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더불어 개발지원에 대한 수혜자 집단이 규정됨으로써,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남미의 포용적 성장 사례에서 조사되었듯이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수혜자 집단 선정 및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파트너십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포용적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Development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finally drawn up on September 2015 at the United Nations Summit. Successors to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composed of 17 goals and 169 targets.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the 2030 Development Agenda is ‘No one left behind’, which pursues ‘inclusiveness’ as a main value of development. Thus SDGs can be achieved through “inclusive growth” by eradicating all forms of poverty among all social groups. Despite such importance, any consensus of the definition of inclusive growth has not yet been draw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academia.

In this report, we discuss inclusive growth based on 1) growth and redistribution 2) pro-poor growth 3) inclusive growth 4) measuring inclusive growth, and highlight equity and opportunity as core elements of inclusive growth. There have been incremental inequality during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but this was expected to be reduced automatically when the economy keep the pace of high growth. Contrary to such belief, it was not the case in most countries. As a result, the need for redistribution has been emerged and entailed by a number of studies on ‘pro-poor growth’ which shares identical concept to inclusive growth.

Intuitively, pro-poor growth is growth that benefits the poor. But the definition requires specifying the meaning of ‘to benefit the poor’ and that is where the conceptual debate over pro-poor growth lies. There are two definitions of pro-poor growth emerged in the literature. One of them focuses on poverty reduction, thus considering pro-poor growth any growth accompanying with a drop in the poverty

rate (Ravallion and Chen, 2003; Grosse et al., 2008). The other definition of pro-poor growth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of the poor relative to the wealthier, rather than on an absolute increase of their income. It requires that poor's income grow more than wealthier people's income. More strictly speaking, it takes in a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mental growth in the income of the poor and the share of the population. It, of course, considers that the poor's share of increased income exceeds not simply their current share of income but also their share of the population (White and Anderson, 2001). In addition to the debate, more recent work has taken non-income dimensions of poverty to the exercise of conceptualizing pro-poor growth concerning that poverty is multidimensional (Kakwani and Silber, 2008). The debate, however, over pro-poor growth remains unsettled.

With those unsettled debates on the definition of pro-poor growth, inclusive growth refers both to the pace and pattern of growth. Inclusive growth recognize economic growth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poverty reduction. The definition of inclusive growth takes a longer term perspective as the focus is on productive employment rather than on direct income redistribution unlike the most debates on pro-poor-growth. For growth to be sustained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broad-based across sectors. Thu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is prioritized. Inclusiveness, in this sense, refers to equality of opportunity in terms of access to markets, resources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Chapter 3 shows the relative tendenc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of developing countries. 26 sample with more than seven variables during observed periods (2000–2013) were selected as target countries. Gross Domestic Production per capita (GDP per capita) was used for an economic growth indicator, and

inequality was represented by Gini coefficient, Human Development Index (HDI), enroll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As a result, in case of Columbia, Gini coefficient did not improve despite the increase in GDP per capita. On the other hand, HDI and overall employment rate increased including female employment rate. This implies less gender inequality. Peru's Gini coefficient and HDI both improved with increase in GDP per capita. Female employment rate increased but the overall enrollment rate declined. Similar to Columbia, HDI of Bolivia increased but inequality was not mitigated. Furthermore, enrollment of female students decreased more than the male students, indicating greater gender gap. In Paraguay, GDP per capita and Gini coefficient were negatively correlated. Gender gap decreased in terms of enrollment and employment rates. HDI of Indonesia increased with greater economic growth, but Gini coefficient also increased. Gender gap wa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education but noticeable for employment. In Venezuela, inequality was mitigated as economic growth increased. However, there still remained gender inequality in regards to education. Inequality, HDI, female enrollment rate improved in case Brazil. Ecuador's Gini coefficient, HDI, female enrollment, employment rates also improved. HDI increased and Gini coefficient decreased in Chile, but gender gap in education and employment sectors were witnessed. Panama's trend was similar to Chile, as gender inequality remained in two sectors. In case of Belarus, HDI increased as well as Gini coefficient, implying worsened inequality. Improvement in inequality was not significant in Serbia, and HDI dropped recently. Employment gap was reduced, but female enrollment rate was still lower than male. In Kazakhstan, the gap of inequality, HDI, female enrollment and employment rates has been improved.

In Chapter 4, we draw implications for successful inclusive partnership through two cases of innova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in Latin America Countries. The first case is Pro Uni (University for all) program in Brazil.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provide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by offering scholarship as well as internship opportunity. This program was effective as it led to higher income and employment of target students.

Second case is 'Promotion of Productive Development through the Inclusion of Women in Quality Employment' in Central America. This initiative establishes policy for quality employment of women with various entities including government, academia and private organizations. First initiated in Costa Rica, the initiative had built 34 project assistance networks and it is now being implemented in Panama and Peru. These two cases give a lesson to diverse sectors and stakeholder for achieving inclusive growth .

In conclusion, we propose several approaches to reflect inclusive growth into practical development interventions. First, inclusive growth should be broadened and recognized as 'sector inclusive issue'. In other words,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in a sustainable way, and designed to obtain not just outcome but positive impact. This will be possible with integration of diverse sector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health, social infrastructure, economic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Second, value chain that can promote fair income distribution should be considered. KOICA is proceeding 'Better Life for Girls' as one of five brand progra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can be a start point to benefit excluded group and to achieve comprehensive growth. Third, donors should support partner countries to identify national inequality and help establish relevant policy. Inclusive growth takes different forms in each country as

observed, thus individual country strategy should be set. Fourth, income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by setting an adequate target group. As analyzed in case study, inclusive partnership should be pursued to identify policy priorities and monitor target group selection of partner countries. Lastly, appropriate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for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maintain inclusive partnership.

I. 서론

2015년 9월 UN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방향성을 담고있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개발의제)』가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발표되었다.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포함하고 있는 2030개발의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표방하며, 현재 지구촌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해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고민을 SDGs와 이행수단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2030개발의제는 개발목표와 수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No one left behind (누구도 뒤처지지 않음)’와 5P의 원칙이다. 5P는 People (사람중심), Prosperity (번영), Peace (평화), Planet (지구환경), Partnership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 및 기아의 종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잠재력 발현의 기회보장, 모든 인간이 번영하고 성취하는 삶을 추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UNGA, 2015). 이러한 원칙 중 번영과 누구도 뒤처지지 않음의 개념은 SDGs를 비롯한 2030개발의제의 중요한 원칙인 ‘포용성 (inclusiveness)’를 드러내는 매개로 사용되고 있다.

“We will seek to build strong economic foundations for all our countries.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s essential for prosperity. This will only be possible if wealth is shared and income inequality is addressed. We will work to build dynamic, sustainable, innovative and people-centered economies, promoting youth employment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 particular, and decent work for all. We will eradicate forced labour and human trafficking and end child labour in all its forms. All countries stand to benefit from having a healthy and well-educated workforce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productive and fulfilling work and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UNGA para. 27)”

위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개발의제 안에서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변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부의 공유,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달성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일자리,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구현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용적 성장은 2015년 개최된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국제회의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제10차 G20 정상회의의 주제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이었으며, APEC 정상회의의 주제도 ‘포용적 성장과 더 나은 세계’로 포용적 성장은 이제 국내적으로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제기구 정책대화의 주요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포용적 성장은 2000년대 후반 범국가적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회복 및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찾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Post-2015 개발의제 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포용적 성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은 빈곤 계층의 삶 개선과 기회 향상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수반하며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포용적 성장의 의미가 정책 목적을 결정짓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된 정책 목표 역시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White (2012)가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책입안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정의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포용성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포용성 성장을 그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포용적 성장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성장주의의 상징인 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불평등,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포용적 성장의 주요 요소 중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발전(development)과 빈곤의 척도인 사회적 요인들은 대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포용적 파트너십 논의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결합양식을 전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적 정립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포용적 성장’과 이러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정확한 의미와 그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화두인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ODA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담론을 성장과 재분배 간의 논의에 이어 친빈곤적 성장 논의로 이후 포용적 성장의 정의와 측정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다루어진 포용성의 특징인 성장에 대비한 불평등의 정도, 교육 및 고용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포용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이러한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파트너십의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 V장은 결론과 향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포용적 성장 논의

포용적 성장은 개발 문헌과 많은 국가의 정책수립 시 핵심적인 요소로 이미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들이 포용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개념에 대한 한 가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포용적 성장은 공평 (fairness)을 단순히 성장, 또는 성장의 부산물로 여겼던 것에서 벗어나는 개발학적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평한 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가 서로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0여년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 과정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한 개발학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성장 요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이면서도 상호 연계성이 강조되는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부상하게 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빈곤감소적 성장 논의의 과정을 통해 포용적 성장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빠른 성장과 산업화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은 초기 소득 재분배의 악화와 성장의 낙수 효과 (trickle down effect)로 인한 빈곤층의 생활 개선의 결합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Kuznets (1955)의 가설에 따르면, 개발 초기에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며 불공평이 심화되지만, 특정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불공평은 감소된다. 즉, 성장 초기에는 생산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도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성장세가 명확한 환경을 구축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다. 결국 성장을 통해 불평등이 증대되지만,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상당수의 개발협력 연구들이 초기 발전경제학자 및 개발 실무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과 '개발의 과정'을 동일시하였으며, 일단 시작된 개발의 과정은 생산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평균 소득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List (1841)는 개발의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이 단계들을 모두 통과한 국가들을 연구했다. List의 4단계는 '전원생활→농업→농업과 제조업의 결합→농업,

제조업과 상업화'로 이루어지고 이는 Rostow의 5단계 모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Rostow의 경제 모델 단계는 (1956; 1959)의 5단계 이론에서는 '전통사회→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충족 단계→도약 단계→성숙 단계→고도 대중소비' 단계로 결국 이러한 단계를 분류한다는 것은,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논리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개발과정은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각 단계로 진입 할 때마다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었다. '한번 시작되면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불가피한 과정에 대한 개념은 인류의 경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직관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개발적 사고에 개발이 장기적으로는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점증적 (incremental)' 과정이라는 암묵적 인식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Berg and Ostry (2011)는 '점증적 과정'에 대한 기대가 미국, 영국과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 선진국의 경제를 통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1. 성장과 재분배 논의

이러한 점증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차 평등성을 확보해가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Berg and Ostry,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실질 소득은 불안적이고 불규칙한 양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성장을 이룩한 많은 국가들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으며, 자동적으로 불평등성이 감소된다고 기대했던 성장의 변곡점을 맞이하지 못했다. 불평등은 지속되거나 심화되었으며, 빈곤의 정도 역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악화되었다. 이는 경제 성장의 결실이 낙수 효과를 통해 가난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개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강화되었다²⁾.

2) 성장의 변곡점과 경제성장의 점증성에 관한 논의를 언제나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국가들은 아직 '시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성장'으로 방향전환을 이루었던 배경과 논거를 다루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논란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Kanbur (2000)은 성장의 과정에 재분배 이슈가 실제 국가 성장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이슈가 인도의 제3차 5년 계획 (Third Five-Year Plan of India, 1961-1966) 등 정부정책과 세계은행의 『Redistribution with Growth (성장과 재분배)』(Chenery et al., 1974)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 논의의 장에서도 이미 이전부터 다루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전의 점증적인 접근을 벗어나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반영하게 되었다. Ahluwalia and Chenery (1974a, b)는 빈곤 문제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빈곤층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임금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성장과 빈곤감소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빈곤층과 빈곤 감소 성장 기반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Dagdeviren et al., 2000). 또한 소득 재분배와 1인당 소득이 Kuznet의 가설 유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검증을 마친 방대한 문헌을 통해 성장과 공평한 분배가 함께 정책 및 시장 이외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Box 1〉 IMF의 불평등, 재분배, 성장에 관한 접근방식

IMF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의 가중과 재분배의 역할, 그로 인한 성장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논의 결과는 불평등성이 성장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하시킨다는데 동의한다 (Berg and Ostry, 2011). 평등성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나, 그 자체가 재분배 활동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Ostry (2014)는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거나, 혹은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부유층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징세 및 개발도상국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분배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재정예산의 여러 요소들 간의 균형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가 저해하는가는 이후의 검증과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러나 거시경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불평등은 성장에 저해요인이고, 재분배는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불평등성이 낮을수록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며, 재분배는 그 자체가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평균적인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성장의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예방적인 효과를 보인다 (Ostry, 2014). 몇몇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배 정책은 일반적으로 친빈곤정책 (pro-poor policy)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더 불공평한 사회가 재분배를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결론같이 여겨지지만, 만일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있어 부유층이 정치과정을 통제하는 상황이라면, 불공평한 사회라도 그 불평등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불평등과 재분배 노력 간의 상관관계는 선진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계량분석과 국가 간 불평등 데이터의 태생적 한계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Ostry (2014)의 결론은 성장과 재분배 사이에는 ‘상충관계 (trade-off)’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어왔다 (Kanbur, 2000).

성장과 공평성 (equity)에 대한 ‘상충관계 (trade-off)’와 ‘낙수효과’ 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시행 된 구조조정 프로그램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Kanbur (2000)는 SAP가 경제성장이 아닌 정책과 정부 구조 개혁에 맞춰져 있어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 SAP 도입 시점에서 가졌던 빈곤과 불공평이 거시경제적 안정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가설 (Dagdeviren et al., 2000)이 프로그램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흔들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SAP 실패의 원인이 단순히 목표를 혼동했거나 건전한 경제 환경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이다.

위의 SAP의 부진한 성과와 함께 개발학 내에서 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논리 전환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홍콩,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이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각광받은 동아시아 개발 경험은 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케 하였다. 아시아 신흥경제 4개국의 경제성장에서는 구조적으로 1인당 소득의 빠른 성장과 비교적 안정적이고 낮은 불평등성이 결합된 “높은 성장률과 빠른 빈곤 감소를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이 지적되었다 (Dagdeviren et al., 2000: 5). 결국 성장과 평등성의 공존 가능하다는 것이며, 성장이 반드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동아시아 경험은 낙수효과에 대한 의의도 제기했다. 즉,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정책과 주요 민간 분야와의 전략적 결합이 주요했음을 결론으로 제시함으로써 (Pempel, 1999) 개발이 단순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반박하고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까지의 사례와 교훈을 통해 Stiglitz and Squire (1998)는 ‘발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³⁾.

이와 함께 불평등성의 해소와 빈곤의 감소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2 Asian Development Outlook』 전세계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3) 물론 이에 대한 반대의 결론을 내린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중 Li and Zou (1998)는 “공공 소비가 효용기능에 진입한다면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 줌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과 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Li and Zou, 1998: 332).

주면서 특히, 최근 불평등이 감소한 남아메리카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반면 빈곤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DB, 2012). 여전히 성장은 빈곤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기는 하나 (Deininger and Squire, 1998; Ravallion, 2001; Dollar and Kraay, 2002; Kraay, 2004) 오직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갔으며, 재분배적 성장이 빈곤감소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다수 발표되었다 (Dagdeviren et al., 2000;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Lopez (2004)의 연구에서는 재분배를 동반한 성장이 보다 효과적이며, 성장 초기의 높은 불평등은 빈곤 감소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불평등은 성장과 다른 거시적 성과 등 모든 국제 이슈에 영향을 미치며 (Berg and Ostry, 2011: 13),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Berg and Ostry, 2011)는 면에서, 재분배의 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성장의 모형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지속하게 되었다.

2. 친빈곤적 성장 (Pro-poor Growth)

개발의 결과에 대한 제고는 경제 과정의 재분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빈곤층이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 개념은 ‘성장은 태생적으로 빈곤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제 정책 센터(International Policy Center for Inclusive Growth, IPC-IG)가 출판한 『One Pager』에서 Zepeda는 성장만이 빈곤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성장이 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친 빈곤적인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측정 및 해석하여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사고 전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Zepeda, 2004: 1).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전에 ‘낙수 효과’를 기대하던 개발에서 빈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장이 개발의 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Dagdeviren et al., 2000; Kakwani and Pernia, 2000), ‘친빈곤적 성장’은 개발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Kraay, 2004; Lopez, 2004; Ravallion, 2004). 그러나 ‘친빈곤 성장’이라는 용어 역시 명확한 합의가 없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됐으며, 아직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많은 연구에서 밝히는 친빈곤적 성장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률 감소를 친빈곤적 성장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Ravallion and Chen, 2003; Grosse et al., 2008).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소득의 재분배와 또는 관련된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빈곤률이 감소되면 이를 친빈곤적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빈곤층의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층이 개발이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인가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빈곤층보다 부유층의 소득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성이 심화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Grosse et al. (2008)는 이를 “약한 절대 친빈곤 성장(weak absolute pro-poor growth)”으로 분류하며, 이는 빈곤의 실질적인 감소보다는 빈곤층의 환경 개선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사회 정치 구조를 빈곤층에 불합리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Lopez, 2004; Grosse et al., 2008).

친빈곤적 성장에 관한 또 다른 정의는 절대적 소득 향상보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상대적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친빈곤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소득이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의의 가장 핵심은 상대적 개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 그 적용이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전체 사회의 평균 소득증가율 보다 빈곤층의 소득 ‘증가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Weeks, 2000; White and Anderson, 2001; Grosse et al., 2008). 이 정의에 따르면 친빈곤적 성장은 빈곤층의 현재 소득 분배가 전체 성장 소득 분배율을 초과할 때 달성된다 (White and Anderson, 2001). Grosse et al. (2008)은 이를 “상대적 친빈곤적 성장 (Relative pro-poor growth)”으로 명명하며, 성장으로 인해 불평등을 감소함과 동시에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Kakwani and Pernia (2000) 소득 불평등이 빈곤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부유층보다 빈곤층이 성장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을 친빈곤적 성장으로 정의했다. 이들의 개념화에 따르면 성장과 소득 분배가 분리되면 순수 성장 (pure growth) 효과를, 소득 분배와 연계되면 불평등 효과 (inequality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데, 성장이 재분배를 강화할수록 즉, 불평등 효과가 클수록 빈곤감소적성장 이라는 것이다.

Grosse et al. (2008)는 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 친빈곤적 성장을 “강력한 절대 친빈곤 성장 (strong absolute pro-poor growth)”로 분류하여 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이 단순히 현재 상태의 소득을 넘어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곤층 소득을 높여야 함은 물론 절대적 불평등 감소 또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 불평등성 고려한 친빈곤성장의 또 다른 형태의 정의는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빈곤층 소득의 성장률을 고려한다 (White and Anderson, 2001). 이러한 정의에서는 실제로 빈곤 감소와 재분배 이슈의 연계성 부족이 부족하다.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빈곤층의 소득은 성장할 수 있으나, 만일 불평등이 아주 미미하게라도 증가한다면 이는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Ravallion, 2004; Kraay, 2004). 예를 들어 비록 중국의 빈곤률이 1981년부터 2005년 동안 97.8%에서 35.3%로 감소했고 5천만 이상의 인구가 빈곤층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친빈곤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친빈곤성장의 정의와 상대적 빈곤 및 소득의 성장률과 재분배와 관련한 정의들은 각각 분석에 있어 장단이 있으며, 하나의 명확한 정의로 합의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친빈곤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에 대한 의견도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빈곤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성장으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Kakwani and Pernia, 2000: 3)”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층에게 불공평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폐지하고, 직접적으로 친빈곤적 성장 정책 추구”를 수반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Dollar and Kraay (2002)는 빈곤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친빈곤성장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거시적 안정성, 금융규제, 국제 무역 등을 포함한 기본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친빈곤 성장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에 소득 이외의 차원을 결합하여 논쟁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결국 빈곤은 단순한 소득 박탈이 아닌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Kakwani and Silber, 2008; 김지현 2015). 같은 맥락에서 Grosse et al. (2008)는 교육, 보건, 영양, 보편적 복지에 대한 측정을 결합하여 친빈곤 성장을 측정

했는데,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빈곤층이 사회 지표 성장에 대한 혜택을 (성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비 소득 차원의 고려가 정책입안 반영되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Grosse et al., 20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빈곤적 성장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친빈곤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친빈곤적 성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포용적 성장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포용적 성장은 친빈곤적 성장과 기본 개념 면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친빈곤적 성장의 의미를 수립하고 강조하는 것을 넘어, 성장 과정이 단순히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민족, 젠더,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정책 입안과 정책적 논의에 자주 등장하지만 Klasen가 최근 “포용적 성장이 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 ADB) 활동의 전략적 기반이 되었지만 포용적 성장을 국가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 (Klasen, 2010: iii)”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친빈곤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합의는 매우 어렵다.

‘포용성’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Kakwani and Pernia (2000)가 친빈곤적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Kakwani and Pernia (2000: 3)는 “포용적 경제 성장 (Inclusive economic growth)”을 빈곤층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장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친빈곤적 (pro-poor)’의 개념은 좀 더 소득(수준 및 분배)에, ‘포용성’은 성장 과정 참여 및 혜택에 초점을 두어 친빈곤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차별적으로 개념 확장을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일부 정의는 빈곤감소적, 친빈곤적 성장의 정의와 혼용된다. Habito (2009)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소득 이외 요소들의 역할이 빈곤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빈곤을 감소시키는 국민총생산 증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Grosse et al. (2008)가 정의한 “약한 절대 친빈곤 성장”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Rauniyar and Kanbur (2010)는 Grosse et al. (2008)가 정의한 ‘상대적 친빈곤 성장’과 유사하게 포용적 성장은 소득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빈곤감소적일 수 있으며, 빈곤 감소 정책은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auniyar and Kanbur (2010)는 소득 이외의 요소와 결합하여 논의를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은 소득 재분배를, 포용적 개발은 소득 외의 요소 개선을 의미한다고 구분하기도 했다. McKinley (2010)와 Klasen (2010)는 전자를 소득에 국한해서, 후자는 비 소득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McKinley (2010) 역시 이러한 구분에 따라 ‘포용적 성장’ 용어를 사용했으며, Klasen (2010)은 수혜자 그룹에 따라 친빈곤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구분하였으며, “친빈곤 성장은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포용적 성장은 보다 보편적인 개념이며, 빈곤층·중산층·부유층을 모두 아우르는 성장이다”라고 주장한다 (Klasen 2010: 2).

Dagdeviren et al. (2000: 7)는 빈곤 감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분배가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정책화된다면 어떤 집단에서 어떤 집단으로, 또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는가가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만일 포용성이 공평 (fairness)의 측면에서 논의된다면, 성장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Klasen (2010)는 포용성의 개념이 제로섬은 아닌 것(non-zero sum)으로 본다. 이는 한 집단의 희생으로 다른 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이와는 별개로’ 빈곤층에게도 혜택 더 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포용성이 모든 계층을 아우른다는 관념을 따르며, 가장 불우한 계층에게 제일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개념을 수용한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불우계층 감소’ 성장으로 볼 수 있다 (Klasen, 2010).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가 정의한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속도와 패턴에 주목한다. 포용적 성장이란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다양화, 경쟁, 직업과 기업의 “창조적 파괴⁴⁾”에 대한 구조적 변혁이라고 보며, “성장이 모든 분야를 아우며 국가 노동력을 포용

4) 슘페터로부터 주창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양산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산업 변이의 과정”을 의미 (Schumpeter 1994: 82-3).

해야 한다”고 보았다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2). 이들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친빈곤적 성장에 초점을 두기는 했으나, “친빈곤적 성장이 직접 소득 재분배 체제와 관련이 있는 반면, 포용적 성장은 재분배가 아닌 경제의 전체 규모를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3). 또한 포용적 성장이 생산성이 낮은 활동에 예측된 노동력이나 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력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재분배 뿐만 아니라 고용을 확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역시 성장의 속도와 패턴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빈곤 감소 및 불평등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AfDB,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포용적 성장을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정당하고 평등하며, 정치적 다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더 많은 인구와, 지역, 국가에 더 넓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AfDB, 2012: 2). AfDB는 단순히 빈곤감소적 성장을 빈곤계층의 복지 향상이 아닌 사회 전반의 기회 확대적 측면에서 정의한다.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가 주장한 성장과 고용 성장 재분배는 Bhalla (2007)에서도 소개되었으나, Bhalla는 현존하는 일자리 생산성의 성장 역시 포용적 성장으로 여긴다. 생산적 고용은 Bhalla (2007)가 피력한 포용적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데,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생산적 고용 즉, 성장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종류와 분야별 재분배, 저소득층의 생산적 성장, 빈곤과 영양실조 측정을 제안한다. Bhalla (2007)와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Klasen (2010) 모두 성장에 대한 논의를 경제성장의 성과와 과정 (outcomes and process)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성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빈곤적 성장의 단면과 맞닿아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의 과정에 성과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있다고 본다. Klasen (2010)는 포용적 성장의 과정은 노동력 투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자체의 차별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성과와 과정 속에서 포용적 성장은 비차별적 성장이면서 동시에 빈곤층의 감소를 의미한다 (Klasen, 2010: 3).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Kakwani and Pernia (2000)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이 “혜택 공유 및 참여”를 의미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참여는 과정과 성과 두 가지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고용 비율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포용적 성장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성장의 성과 분배와 무관하지 않고, 이러한 성과의 분배가 결국은 참여기회에 영향을 주는 순환 논리를 인지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Ramos, Ranieri and Lammens (2013)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참여의 관계에 주목하며, 포용성을 측정할 때, 이 두 측면에 대한 지표를 세분화함으로써 정의를 발전시켜왔다. 이익의 불합리한 공유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대표되며, 이는 친빈곤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이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었고, 고용률로서 참여를 측정하였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학계와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구에서도 각각의 방식으로 포용적 성장을 정의하고 있다. 2011 OECD와 World Bank 간 회의에서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포용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Mello and Dutz, 2012), 이로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가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음을 알렸다. 동 회의에서 나온 발표와 논의를 평가하며, White (2012)는 포용성이 저소득 불평등; 절대 빈곤의 감소; 성장의 외부효과를 내재화; 남-북 소득 격차 감소; 교육, 금융, 법 체계의 접근에 대한 불평등한 기회 감소; 국제 금융 기관 거버넌스에서 신흥 시장에 대한 배려 등 최소한 6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포용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바라봄과 동시에 정의를 통합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설명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증가된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공정하게 (fairly) 돌아가도록 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포용성은 모든 계층 또는 그룹이 소득 및 복지의 모든 측면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한 교육, 보건 등의 사회적 혜택과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OECD 2014).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OECD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레임워크를 개발 또는 개발을 지원하여 회원국들의 포용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포용적 성장 모델을 개발과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ox 2 참조).

〈Box 2〉 OECD의 포용적 성장 접근법

OECD는 2012년 회원국 정부가 불평등성 심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Inclusive Growth Initiative)』를 발족했다. 동 이니셔티브는 1인당 GDP가 증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복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삶의 질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 보다는 광의의 기준이 필요하다. 소득과 재산 이외에도 인간의 웰빙은 비-소득 부문 즉, 건강/교육/고용환경 등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GDP 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웰빙 역시 인구 전체의 평균값으로만 볼 수 없다.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는 경제성장으로부터 오는 이익이 사회의 모든 그룹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면 온 좋은 소수의 인구가 이익을 독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룹의 인구들의 삶의 질을 분석해야 한다.

OECD의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Inclusive Growth Framework)』는 사회적 복지문제는 해결하고 해당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삶의 질의 다면성"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성 요소를 포함한 평균 가구당 실질 가처분 소득으로 측정되는 소득의 측면과 보건, 실업률 등 계량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가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들을 기초로 하는 비-소득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2012년 데이터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실업률에 관계된 삶의 질은 가구 평균 소득의 29%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면적인 삶의 질 개념은 비소득 측면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고용, 보건 또는 소득과 관련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어 정책입안자들에 좋은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이 OECD는 지속적으로 다면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의 부족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신흥 경제 및 중소득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 프레임워크의 정합성에 관한 테스트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OECD (2014).

1990년대부터 세계은행은 성장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보는 기층 고유형 성장 (broad-base growth)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중심적 성장 정책을 유지하되 모든 구성원 특히, 빈곤층의 성장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용성은 시장 및 자원에 대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World Bank 2009). Box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은행은 민간기업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통한 여러 인구 그룹의 교육 및 고용의 기회확대를 포용적 성장의 주요 이슈로 상정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ox 3〉 세계은행의 포용적 성장과 불평등성

세계은행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절대빈곤을 3% 이하로 감소하고 모든 국가에서 하위 40% 소득의 성장으로 정의되는 '공동의 번영 (Shared Prosperity)'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경제성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기는 하나 성장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 만약 불평등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난 10년간의 성장세가 2030년까지 지속된다면, 절대 빈곤은 5.6%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 (현재 14.5%). 2000년대 후반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하위 40% 소득 증가가 국가의 평균보다 상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취약계층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이러한 분석은 소득불평등이 상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어가고는 있으나, 현실을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기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World Bank 2006). 젠더, 부모세대의 소득, 인종, 출신 지역 등은 인간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하고 경제적 유동성을 제약한다. 인간기회지수 (Human Opportunity Index)는 이러한 다층적인 불이익과 불평등을 측정하여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교육, 보건 및 기타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서비스 접근과 관련한 재분배 정책 중 중남미 지역에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현금지원 (public cash transfer) 프로그램 등은 주목할 만하다. 목적이 잘 정리된 지원프로그램과 효과적인 재정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위 계층의 인적자원 강화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과 삶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Azevedo et. al. 2013). 민간 기업이 하위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위계층 역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그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열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과 함께 ADB는 2007년 포용적 성장 개념을 개발협력 분야에 수용함으로써 동 분야의 논의를 이끌어 왔다. ADB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기제와 비시장적 개입정책의 결합을 통해 빈곤층의 사회정치적 권리보호와 교육, 의료 등 기회의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강조하는 성장정책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평등과 보편적 복지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DB 2007). 더불어 UNDP 역시 평등한 사회에서 개발성고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포용적 성장이 이제는 목표이자 개발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 UNDP의 포용성은 성장의 헤

5) <http://www.ipc-undp.org/what-inclusive-growth>

택을 공유하고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냄을 의미한다. 특히 UNDP는 참여적 발전의 개념과 연계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의사결정 및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밝히고 있다.

4. 포용적 성장의 측정 문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은 임시로 내린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볼 것인가의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포용적 성장 측정이나 포용적 성장의 계량화는 개념적 활동을 넘어서지 못했다 (e.g. Rauniyar and Kanbur, 2010). 현재 일부 분석들은 포용적 성장의 측정에 대해 데이터 유효성을 포함한 실질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포용적 성장의 경우, Habito (2009)는 ‘약한 절대 친빈곤성장’ 패턴 측면에서 성장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 또는 성장의 빈곤 탄력성 등을 분석하였다. Habito는 빈곤 탄력성을 소득을 기반한 단일적 측면과, UN의 인간 빈곤 지수인 다면적 측면을 비교하여 주요 차이점을 발견했다. Habito는 이를 개발 사업을 보다 잘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빈곤감소를 위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포용적 견해를 채택한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는 포용적 성장을 평가하는 분석틀을 제시하며, 성장의 속도와 패턴에 주목했다. 빈곤층의 고용, 자본의 비용, 지리학,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룸으로써, 포용적 성장의 방해 요소를 파악하고, 국가별로 포용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 확보를 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포용성에 대한 그 어떤 수치도 제공하지 않지만, Zambia 사례가 보여 주듯이 포용성의 장애물을 진단하여 정책 입안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McKinley (2010)는 ADB의 『장기 전략 프레임워크 2008-2020 (Long-term Strategy Framework 2008-2020)』에 기반을 두어 포용적 성장 수치를 제안했다. 여기서는 포용적 성장을 “(i) 경제적 기회를 생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ii)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McKinley, 2010: 1). 이러한 데이터들은 성장, 생산적 고용, 경제 인프라, 소득 빈곤 및 평등, 젠더, 역량, 사회적 보호와 같은 지표를 포함하며, 이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화 및 데이터의 유효성과 일관된다. McKinley (2010)은 다양한 포용적 성장 지표의 구성

요소를 생성할 때, 임의로 설정된 체제와 점수 체계의 주관성과 작위성을 주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사례조사에서 사용된 포용적 구성 지표의 적용은 포용적 성장 측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AfDB역시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고 포용적 성장을 장기적 전략의 주요 원칙으로 통합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지수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기초 인프라 접근성 향상, 사업 기회 향상,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지역 통합, 사회 보호, 생산적 지식의 접근, 농업 생산성을 포함된다 (AfDB, 2012).

Ramos et al. (2013)는 포용적 성장 측정 방법론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성장이 혜택 공유라는 개념에 따라 소득빈곤, 불평등, 고용비율 등을 분석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용을 결합하여 참여 부문을 측정하며, 세 가지 지표는 각각 동일한 가중치로 측정된다. 이를 토대로 43개국의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수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GDP 성장과 비교한 포용성의 수준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Ramos et al. (2013)은 성장에 동반한 포용성 변화를 평가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서로의 연계성보다는 부수적인 요소를 파악하며, 성장이 이루어지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그 정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점을 살펴 보았다. 정리하자면 포용적 성장은 친빈곤적 성장과 개념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의 정의는 다음의 4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대량의 일자리와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즉,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서 빈곤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리고 성장과 재분배 간의 이분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환의 논리를 유지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의 정의는 친빈곤적 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 중 일부는 친빈곤적 성장의 ‘약한 절대성’ 또는 ‘상대성’과 번갈아 사용되기도 한다. 성과(outcomes)에 비-소득적 요소를 결합하거나 성장 과정 (process)의 참여와 기회를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성장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갖고 그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성과와 과정을 결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와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생산적 고용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친빈곤적 성장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개념

자체가 친빈곤적 성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대체하기보다 포용성을 결정하는 빈곤 및 불평등 해소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무엇이 성장을 포용적이게 하는가? 포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포용성은 단순히 소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더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은 성장으로 인한 포용성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가? 이것을 포용적 성장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또는 성장을 수반하는 포용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을 증가시킨 포용성은 성장을 자동적으로 포용적이게 만들지 않는다. 가령, 포용성에 대한 사회 정치적 재고가 부재한 가운데에서 성장이 포용성을 얻었을 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역전 된다. 포용성을 촉진하는 정책은 재난이 발생해도 이러한 역전의 확률을 낮춤으로써, 회복력 있는 국가를 만든다. 반대로 포용성에 대한 재고 및 실제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용성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들이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과 ‘포용성 지표’의 수치가 높은 것의 차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정치적 권리 박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곤층이 직면한 문제는 경제적 수입의 격차 뿐 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소득적 요인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가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빈곤층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용적 성장의 가장 큰 요소는 기회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취업, 교육, 의료 등 경제생활을 위한 진입조건에서의 차별구조)’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시장 진입 이후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 정도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수입과 재산 축적의 불평등)’으로 대별되는데, 사회적 약자 계층이 수용하기 어렵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는 진입조건에 해당하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이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중점도 결과적 불평등의 해결보다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주목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 역시 포용적 성장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민중의 실질적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III. 성장과 불평등의 실제

1. 개요

본 장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성장과 불평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국가별 관련 지표의 변화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장에 대한 지표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활용하였으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 취학률(enrollment rate), 고용률(employment rate)을 활용하여 성장에 따른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GDP per capita는 개별 국가의 국내총생산⁶⁾을 전체 국민수로 나눈 것으로, 실질적인 소비수준이나 경제성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GDP가 아닌 GDP per capita 값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GDP per capita 수치는 OECD 국가회계데이터(national accounts data)에서 수집하고,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처음 소개한 지표로 소득격차를 계수화 한 것이다. 즉,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또는 부의 편중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본래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지니계수는 단일한 조사기관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본 연구에서 확보한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조사 기관이 다르고, 특정 국가 안에서도 여러 기관이 지니계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지니계수를 사용함에 이어서는 데이터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 개의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만을 사용하였다. 각 국가별 지니계수 출처는 표 하단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6)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한 소득이 포함하는 것으로, Gross Domestic Product, GDP로 표기

는 다른 지수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니계수에 100을 곱하여 0~100으로 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HDI는 90년대부터 매년 각국의 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UNDP가 발표하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IHDI, GII, MPI 등) 중 하나이다. HDI는 건강, 교육, 생활수준과 관련된 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HDI를 계산하는 식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각 항목마다 사용하는 지표는 출생 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평균교육연수 및 기대 교육연수 (mean and expected year of schooling), 1인당 국민 총 소득 (GNI per capita)이다. 2010년부터는 건강, 교육, 소득의 산정 방식이 바뀌어 2009년 이후 HDI의 절대적인 값이 작아졌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 공개 당시의 값, 즉 산정 방식 변경 이전과 이후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였고, 절대적인 값의 이동이 아닌 추세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HDI는 UNDP 통계시스템과 연도별 HDI 보고서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HDI 지수도 지니계수처럼 0~1사이 값을 표시되는 지수여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수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같은 방식으로 100을 곱하여 0~100으로 표시한 값을 HDI 지수로 사용하였다.

취학률은 국민의 교육기회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표로, 입학연령 대비 입학자 수의 비율로 산출한다. 취학률은 공식취학연령의 입학만을 고려한 순 취학률 (net enrollment)과 공식취학연령 외에 다른 연령의 입학도 함께 고려한 총 취학률 (gross enrollment) 두 가지 방식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순 취학률의 경우 데이터 연속성이 총 취학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공식 초등학교 입학연령 대비 초등학교 입학한 총 학생 수의 백분율로 나타낸 총 취학률 (gross enrolment ratio)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취학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늦거나 이른 입학 또는 학년 반복 (grade repetition)으로 인한 나이가 많거나 적은 학생 (over-aged and under-aged)을 입학자 수로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의 값이 100%를 초과하는 수치도 나타나고 있다.

7) 기존에는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성인문해율과 총취학률이 기초 지표로 포함되어 HDI가 산출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성인문해율과 총취학률 대신 평균 교육 연수와 기대교육연수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도 기존에는 1인당 GDP를 사용하였으나, 2010년부터 1인당 GNI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취학률 데이터는 UNESCO에서 수집하고 데이터를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용률은 기본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취업자 수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란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각 국가별로 발표하는 추정치 (national estimate) 값도 있지만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의 추정치 (modeled ILO estimate)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기 4 지표를 사용하면서 공통적으로 조사기간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표 중 특정 연도에 해당하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GDP와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연도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만 해석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 정도를 해석하기 위해 가로축(x)에는 일괄적으로 GDP를 놓고 지니계수, HDI, 취학률, 고용률을 세로축(y)에 놓아 그 추세를 관찰하였다. 특히 취학률과 고용률에서는 남녀별 취학률과 고용률도 수집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남녀 간 취학률 및 고용률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격차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와 같은 추세 등을 확인하였다.

세계은행 기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일부 혹은 다수의 지표에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해 세계은행 기준 개발도상국 중 데이터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장 연속성이 떨어지는 지니계수가 분석시기인 14년 중 7개 이상의 값을 갖고 있는 국가 26개국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선정된 26개국 중에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볼 국가는 우선 KOICA 중점협력국과 GDP와 지니계수, 취학률, 고용률과 관계를 살펴본 후 상관관계가 강한 국가들을 위주로 14개국을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례국 구성

국가명	소득수준	지역구분	KOICA 중점협력국	
			제1기	제2기
콜롬비아	UMIC	중남미	○	○
페루	UMIC	중남미	○	○
볼리비아	LMIC	중남미	○	○
파라과이	LMIC	중남미	○	○
인도네시아	LMIC	아시아	○	○
베네수엘라	UMIC	중남미		
브라질	UMIC	중남미		
에콰도르	UMIC	중남미		
칠레	UMIC	중남미		
파나마	UMIC	중남미		
벨라루스	UMIC	동구 및 CIS		
세르비아	UMIC	동구 및 CIS		
카자흐스탄	UMIC	동구 및 CIS		
아르메니아	LMIC	동구 및 CIS		
우크라이나	LMIC	동구 및 CIS		
조지아	LMIC	동구 및 CIS		
키르기즈공화국	LMIC	동구 및 CIS		
엘살바도르	LMIC	중남미		
온두라스	LMIC	중남미		
마케도니아	UMIC	동구 및 CIS		
터키	UMIC	동구 및 CIS		
도미니카공화국	UMIC	중남미		
멕시코	UMIC	중남미		
아르헨티나	UMIC	중남미		
우루과이	UMIC	중남미		
코스타리카	UMIC	중남미		

* 소득수준은 2014~2016년도 기준을 사용

** 지역은 KOICA에서 분류하는 기준을 사용

*** 음영은 데이터 해석 대상 국가

2. 콜롬비아 (중점협력국)

〈표 2〉 콜롬비아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2,472.2	236.06	55	77.2	118.9	119.1	118.6	53.9	71.1	37.7
2001	2,395.9	422.26	55	77.9	116.0	116.6	115.5	56.1	72.5	40.7
2002	2,355.7	477.38	57	..	116.9	117.5	116.4	56.9	72.4	42.3
2003	2,246.3	820.32	53	..	..	..	..	59.3	73.6	45.7
2004	2,740.2	559.88	55	79	118.4	119.2	117.6	57.4	71.9	43.8
2005	3,386.0	644.61	54	79.5	119.6	120.8	118.4	58.6	73.4	44.6
2006	3,709.1	935.9	57	80	119.7	120.6	118.8	57.0	71.1	43.8
2007	4,674.2	666.18	56	80.7	119.7	120.3	119.2	56.7	70.9	43.3
2008	5,433.7	923.61	54	..	119.6	119.9	119.2	57.2	71.6	43.7
2009	5,148.4	1011.51	55	68.5	119.8	120.1	119.5	58.8	72.5	46.0
2010	6,250.7	481.82	54	68.9	114.9	116.0	113.8	59.1	72.4	46.5
2011	7,227.8	792.05	..	71	..	..	..	59.8	73.1	47.3
2012	7,885.1	616.83	..	71.9	..	..	..	60.2	73.4	47.8
2013	8,028.0	577.8	..	71.1	..	..	..	60.3	73.3	48.1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콜롬비아의 GDP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246달러에서 8,000달러를 넘어서는 약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ODA 금액은 2000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 8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5억~10억 달러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의 경우 55를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HDI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취학률은 변화는 보여도 뚜렷한 경향은 드러나지 않고, 남녀 격차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고용률은 2000년 53.9%에서 2013년 60.3%로 증가하였고, 남녀 격차 역시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GDP가 큰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요소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간개발지수의 상승으로 관련 요소들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취학률 부문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불평등 심화도, 완화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는 고용률의 상승을 통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OICA가 최근 3년 콜롬비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사업은 아래 Box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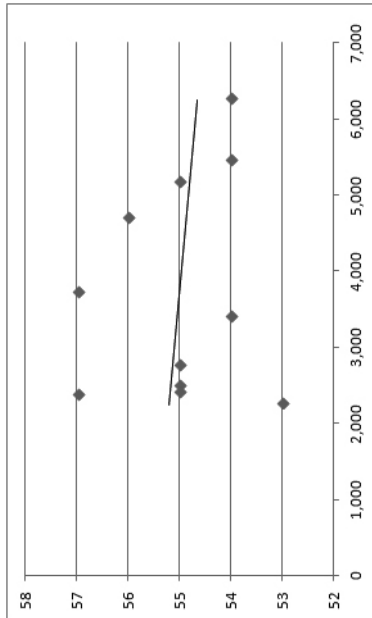
〈Box 4〉 KOICA의 콜롬비아 지원 사업 (2012-2014)

콜롬비아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07-'15/1,150만불)
 콜롬비아 농촌지역 빈곤퇴치사업('11-'15/500만불)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11-'15/300만불)
 콜롬비아 중남미 직업훈련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11-'13/5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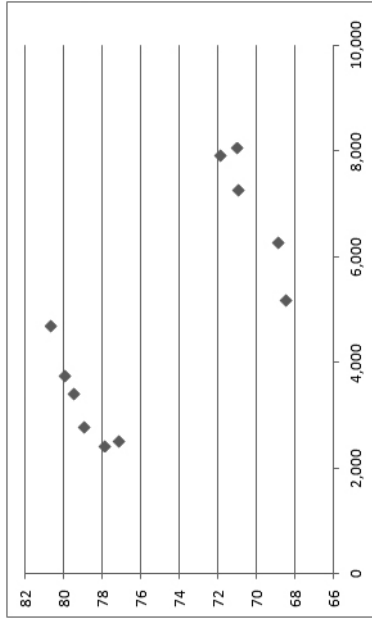
이 중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 '농촌지역 빈곤퇴치사업'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클러스터 강화 사업', '직업훈련역량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콜롬비아의 고용률 상승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취학률 부문에 불평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콜롬비아 지원 시 취학률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불평등 개선에 기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콜롬비아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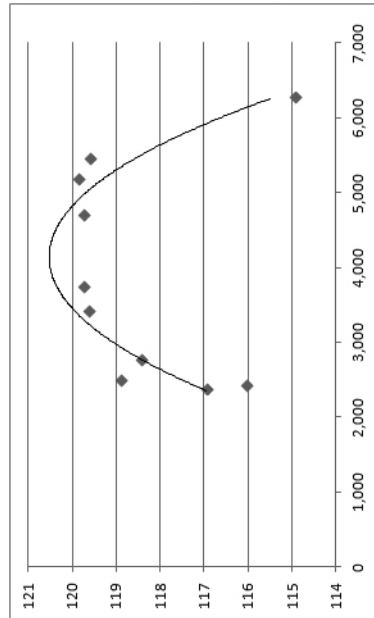
〈그림 1-1〉 콜롬비아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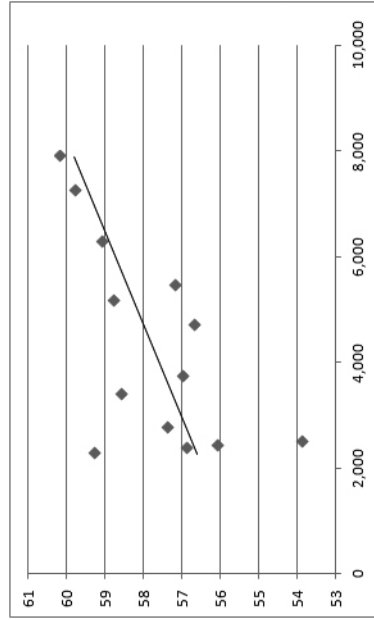
〈그림 1-2〉 콜롬비아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3〉 콜롬비아의 취학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4〉 콜롬비아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3. 페루 (중점협력국)

〈표 3〉 페루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967.2	275.7	49	74.7	122.2	122.7	121.7	65.7	77.8	53.7
2001	1,964.6	389.93	51	75.2	121.2	121.5	120.9	69.5	80.0	59.0
2002	2,046.4	358.5	53	..	120.0	120.3	119.7	66.8	77.2	56.5
2003	2,191.4	408.9	52	..	117.7	118.1	117.3	64.3	74.2	54.5
2004	2,445.4	433.11	47	76.7	116.0	116.4	115.7	65.1	75.6	54.6
2005	2,714.5	458.53	48	79.1	114.8	115.1	114.5	64.8	75.4	54.3
2006	3,143.6	432.33	47	79.9	113.8	114.1	113.4	66.6	78.1	55.1
2007	3,611.3	398.52	48	80.6	113.2	113.5	112.9	71.0	80.6	61.5
2008	4,244.5	432.08	46	..	109.5	109.7	109.3	71.8	81.4	62.2
2009	4,178.8	410.32	46	71.8	107.8	108.0	107.6	72.6	80.9	64.3
2010	5,056.3	383.76	45	72.3	107.3	107.4	107.1	72.9	81.2	64.7
2011	5,731.3	446.02	..	72.5	104.9	105.3	104.5	73.1	81.3	64.9
2012	6,388.8	371.33	..	74.1	99.6	100.2	98.9	73.4	81.5	65.3
2013	6,620.6	374.66	..	73.7	101.6	102.1	101.2	73.3	81.3	65.3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페루의 GDP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2,000달러에서 6,600달러로 3배가 넘는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ODA 금액은 4억 달러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지니계수는 2002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HDI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취학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녀 간 격차에서 변동은 있어도 뚜렷한 경향을 보이진 않았다. 전체고용률의 경우에는 2000년 65%에서 2013년 73%로 증가하였고, 남녀 격차는 8%p 가량 줄어들었다.

페루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개발지수의 상승을 통해 관련 요소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 특히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평등한 부분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약층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감소하며 교육에 대한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ICA가 최근 3년 페루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사업은 Box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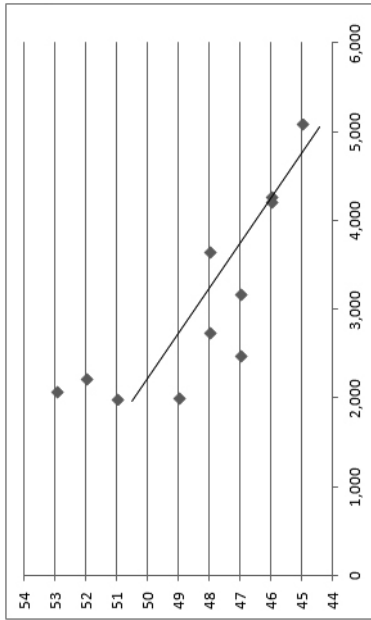
〈Box 5〉 KOICA의 페루 지원 사업 (2012~2014)

페루 꾸스코 국립대학(UNSAAC) 치과 역량강화 및 꾸스코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사업('10-'15/290만불)
 페루 꼬라오 농촌지역개발 사업(2010~2011/100만불)
 페루 꼬마스 제2한-페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11-'16/320만불)
 페루 리마 및 까야오 건강증진 프로그램('13-'17/750만불)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로 역량강화사업('13-'16/250만불)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로 역량강화사업('13-'16/334만불)
 페루 전자무역 Single Window 관세행정 현대화사업('14-'16/50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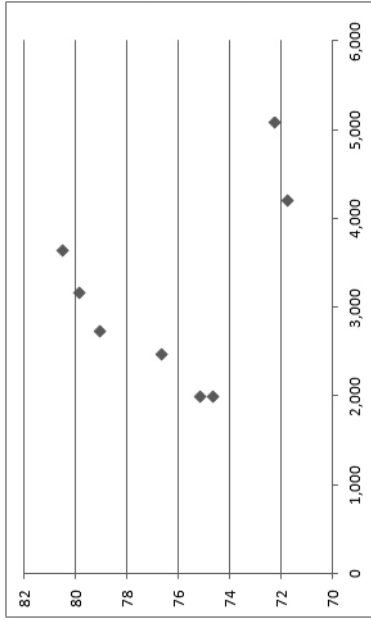
이 중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사업', '농촌지역개발 사업' 및 기타 보건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페루에서도 경제성장과 취약층 반비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시 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페루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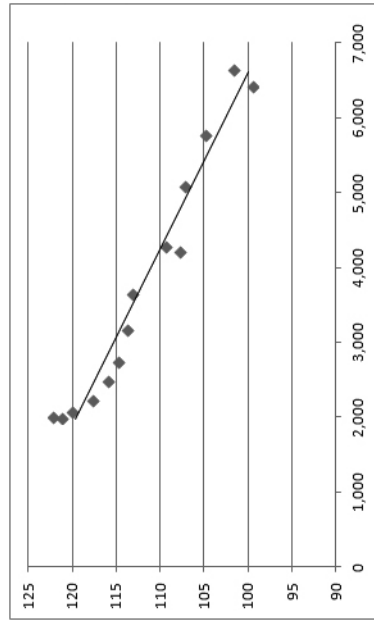
〈그림 2-1〉 페루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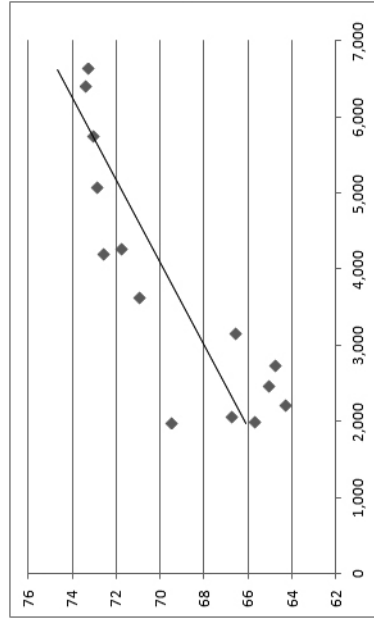
〈그림 2-2〉 페루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2-3〉 페루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2-4〉 페루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4. 볼리비아 (중점협력국)

〈표 4〉 볼리비아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007.0	330.57	..	65.3	111.5	112.3	110.7	67.1	78.5	56.2
2001	958.2	547.9	56	67.2	109.9	110.6	109.2	66.8	77.9	56.1
2002	913.6	772.97	58	..	111.3	112.0	110.7	66.9	78.2	56.1
2003	917.4	628.95	53	..	109.4	109.8	109.0	67.0	78.1	56.4
2004	978.3	957.98	..	69.2	106.9	107.1	106.7	67.9	78.7	57.6
2005	1,046.4	451.59	56	72.3	..	..	..	67.3	77.8	57.2
2006	1,233.6	563.34	54	72.6	106.7	106.8	106.6	67.5	77.8	57.6
2007	1,389.6	462.49	55	72.9	106.4	106.6	106.3	67.9	77.7	58.4
2008	1,736.9	497.86	54	..	105.4	105.7	105.0	69.7	79.4	60.3
2009	1,776.9	488.01	..	63.7	101.8	102.3	101.1	69.5	78.9	60.5
2010	1,981.2	546.43	..	64.3	98.0	98.7	97.3	69.9	78.8	61.1
2011	2,376.3	435.27	..	66.3	94.5	95.2	93.7	70.3	79.1	61.7
2012	2,640.5	342.23	..	67.5	92.0	93.0	91.0	70.4	79.1	61.9
2013	2,942.4	279.62	..	66.7	90.9	92.3	89.6	70.6	79.2	62.2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의 GDP는 2000년에 1,007달러에서 2003년 917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2013년에는 2,742달러까지 올라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ODA 금액은 2004년까지 약 9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한 후 2013년에는 2억 8천만 달러정도에 머물고 있다. 지니계수는 2008년까지 다소 하락하였지만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HDI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취학률은 페루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녀 격차는 2006년까지는 줄어들다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전체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증가 폭이 3%로 적은 편이고, 남

녀 격차가 좁혀지곤 있지만 여전히 큰 차이(2013년의 경우 17%)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 역시 경제성장에 따라 인간개발지수와 관련된 요소는 개선되었지만 불평등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취학률의 감소와 더불어 최근 여학생의 취학률이 더 빠른 추세로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기회에 있어서 남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남녀 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KOICA가 최근 3년 볼리비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Box 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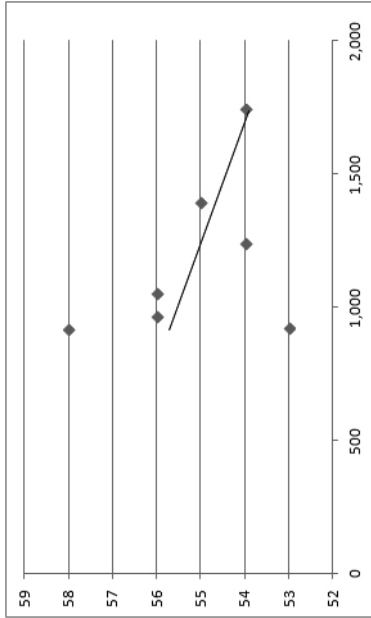
〈Box 6〉 KOICA의 볼리비아 지원 사업 (2012-2014)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10-'18/1,138만불)
볼리비아 과라요스지역 상수도시설 구축사업('09-'14/458만불)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사업('11-'17/969만불)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주 몬테베르데지역 관개용 지하수개발사업('11-'15/327만불)
볼리비아 엘알토 한국병원 3차 지원사업('13-'16/840만불)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13-'16/500만불)
볼리비아 베니주 3차 병원건립 및 1, 2차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사업('14-'20/1,50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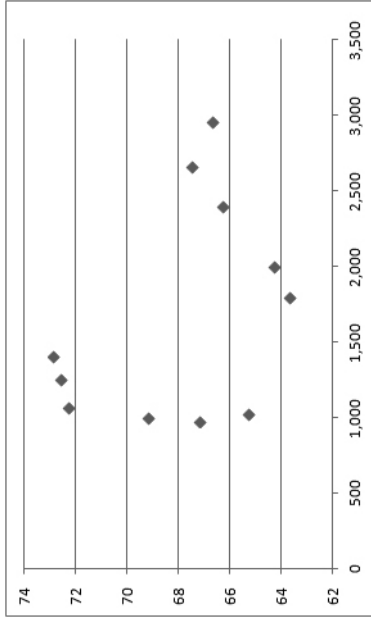
이 중 '고원지역 생산성증대 지원 사업'과 기타 보건 사업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 및 고용에서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3〉 볼리비아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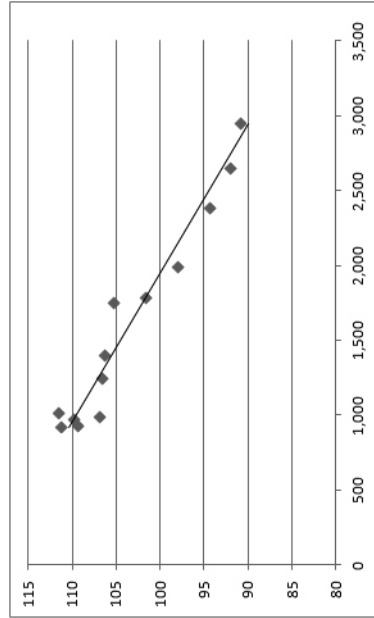
〈그림 3-1〉 볼리비아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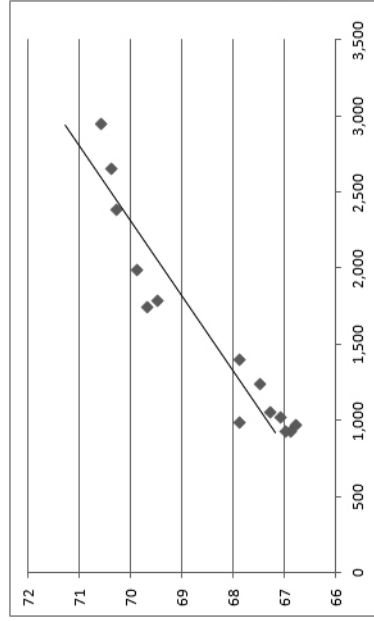
〈그림 3-2〉 볼리비아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3-3〉 볼리비아의 취학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3-4〉 볼리비아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5. 파라과이 (중점협력국)

〈표 5〉 파라과이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545.6	68.74	..	74	119.5	121.8	117.2	63.8	80.9	46.3
2001	1,417.3	49.74	53	75.1	118.5	120.7	116.3	64.1	80.4	47.6
2002	1,148.2	48.54	55	..	117.1	119.2	115.0	62.2	78.3	45.7
2003	1,174.8	53.94	55	..	113.0	114.9	111.1	64.3	80.2	48.1
2004	1,408.5	56.52	52	75.7	111.7	113.4	109.9	64.8	80.5	48.9
2005	1,507.1	56.77	51	75.4	111.3	112.9	109.7	66.2	81.5	50.6
2006	1,809.7	63.92	52	75.7	108.4	110.0	106.7	65.8	80.8	50.6
2007	2,312.2	87.93	52	76.1	105.4	107.1	103.7	66.8	81.9	51.5
2008	3,059.9	98.91	50	..	102.3	104.1	100.5	66.8	82.1	51.3
2009	2,600.2	110.33	49	63.4	99.4	101.1	97.7	67.2	81.7	52.5
2010	3,228.3	109.8	50	64	97.5	99.5	95.4	65.9	80.7	50.9
2011	3,988.0	89.71	..	66.5	94.8	96.7	92.9	67.0	81.8	52.1
2012	3,855.6	80.63	..	66.9	96.5	98.1	94.8	66.7	81.3	52.1
2013	4,469.2	63.72	..	67.6	..	..	..	66.6	81.2	52.0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파라과이의 GDP는 2000년 1,546 달러에서 2003년 1,175달러로 약간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3년 4,469달러를 기록했다. ODA 금액은 2009년 약 1억 달러까지 증가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HDI는 2007년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취학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고용률에 있어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파라과이는 GDP가 감소하는 기간(2001~2003) 동안은 지니계수가 상승(53→55)하였고, 증가하는 기간(2003~2010)에는 반대로 하락(55→50)하여, 경제성장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취학률은 감소하지만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 교육에 대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의 경우에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KOICA가 최근 3년 파라과이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사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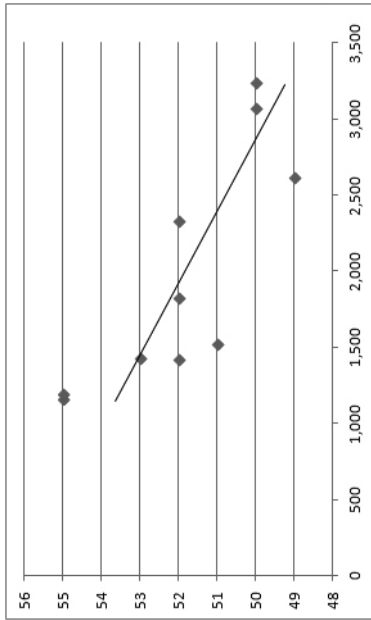
〈Box 7〉 KOICA의 파라과이 지원 사업 (2012~2014)

파라과이 산페드로 종합병원 건립사업('09-'11/400만불)
파라과이 고등직업훈련원 건립사업('10-'15/538만불)
파라과이 산빠블로 모자병원 역량강화사업('13-'16/688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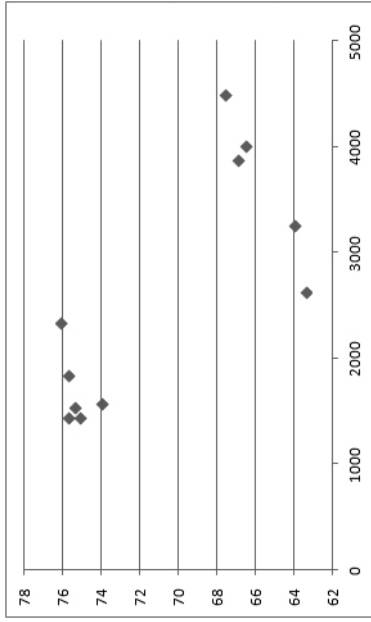
이 중 보건 관련 사업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불려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등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은 파라과이의 고용률 상승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파라과이의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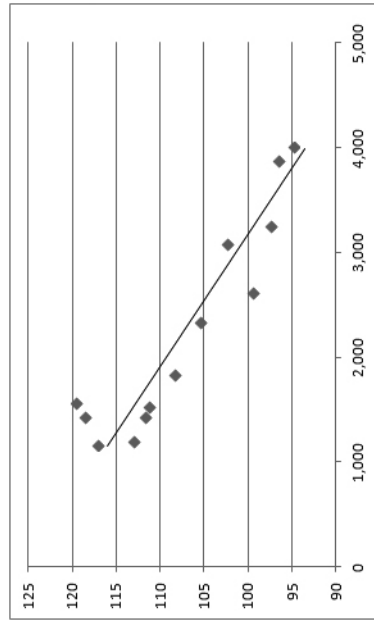
〈그림 4-1〉 파라과이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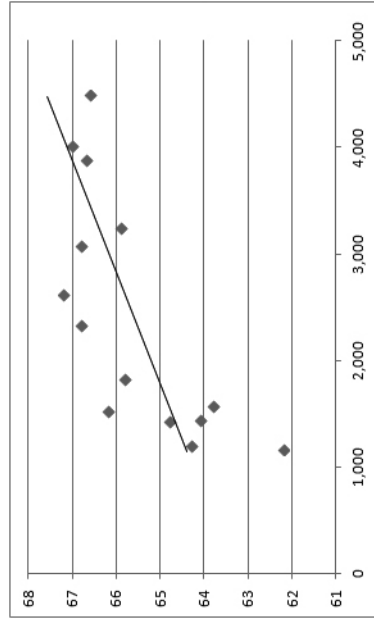
〈그림 4-2〉 파라과이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4-3〉 파라과이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4-4〉 파라과이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6. 인도네시아 (중점협력국)

〈표 6〉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780.1	726.68	..	68.4	110.3	111.8	108.7	63.3	79.8	47.1
2001	748.2	605.04	..	68.2	111.2	112.5	110.0	61.8	79.1	44.7
2002	900.1	704.11	33	..	111.6	112.7	110.4	60.9	78.0	44.1
2003	1,065.7	731.13	32	..	111.3	112.1	110.4	60.8	78.5	43.4
2004	1,150.3	675.48	32	71.1	110.7	111.3	110.2	60.8	78.2	43.5
2005	1,263.5	1316.05	36	72.3	109.8	111.1	108.4	60.1	77.3	43.0
2006	1,590.2	1244.17	33	72.9	108.1	109.3	106.8	60.7	77.8	43.8
2007	1,860.6	1303.22	36	73.4	111.1	112.6	109.5	61.6	78.0	45.3
2008	2,167.9	1202.96	35	..	109.5	110.0	109.0	62.0	77.9	46.2
2009	2,262.7	1151.2	37	59.3	109.9	110.6	109.1	62.5	78.3	46.8
2010	3,125.2	1149.37	38	60	109.9	107.8	112.2	63.0	79.3	46.7
2011	3,647.6	1173.2	39	61.7	109.1	106.9	111.4	63.3	79.6	47.2
2012	3,700.5	1204.79	41	62.9	108.5	108.5	108.6	63.7	79.7	47.7
2013	3,623.5	1161.35	..	68.4	..	..	..	63.5	79.5	47.6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National Socio Economic Survey Consumption Module;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인도네시아의 GDP는 2000년 780달러에서 2012년 3,700달러를 기록하여 약 5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ODA 금액은 7억 달러에서 2005년 13억 달러 정도로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현재 12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2002년 33에서 2012년 4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HDI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취학률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남녀 간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여학생의 취학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고용률은 2003년까지는 감소하였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남녀 간 격차는 매우 큰 편(2013년 기준 31.9%)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인간개발지수 관련 요소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평등한 정도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학률에 있어서는 남녀 격차가 오히려 역전되는 모습으로 교육 기회에 있어 여학생에 대한 불평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는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약 60%만이 고용의 기회를 누리고 있어 여성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KOICA가 최근 3년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사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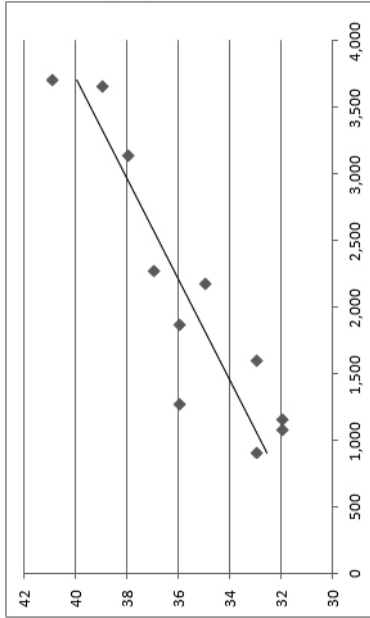
〈Box 8〉 KOICA의 볼리비아 지원 사업 (2012-2014)

한.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
 인도네시아 팜오일 폐잔재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및 부산물 생산사업('09~'10/250만불)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09~'11/400만불)
 인도네시아 정부혁신 역량강화 2차(2009-2011/200만불)
 인도네시아 연료전지 활용 발전소 건설사업('09~'11/300만불)
 인도네시아 에너지,환경,천연물질 연구소 건립사업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사업
 인도네시아 중부 깔리만탄 지역 농업개발 계획수립 및 시범사업(2010-2013/250만불)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 개발센터 구축 사업('11-'14/550만불)
 인도네시아 섬유품질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12-'14/150만불)
 녹색성장정책 지원사업/GGGI
 인도네시아 IT 행정 역량강화사업('13-'15/370만불)
 인도네시아 선박안정성제고 및 역량강화사업('13-'15/130만불)
 인도네시아 자바 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13-'15/350만불)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녹색학교 실행 사업('12-'13/70만불)
 인도네시아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13-'15/500만불)
 인도네시아 짜따룽강유역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14-'16/50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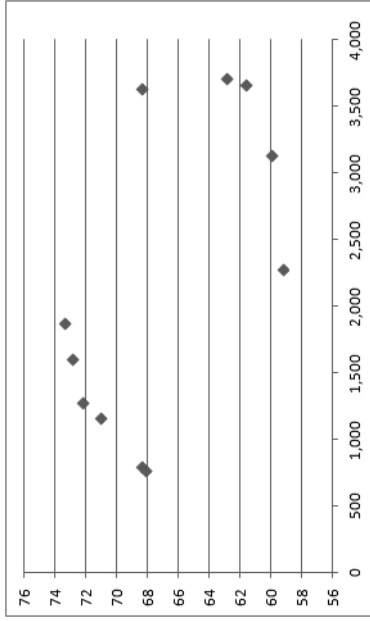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부분이 기후, 환경, IT 등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빈곤층이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고용률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5〉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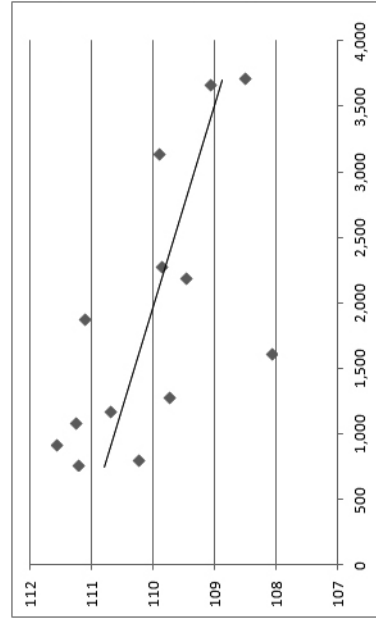
〈그림 5-1〉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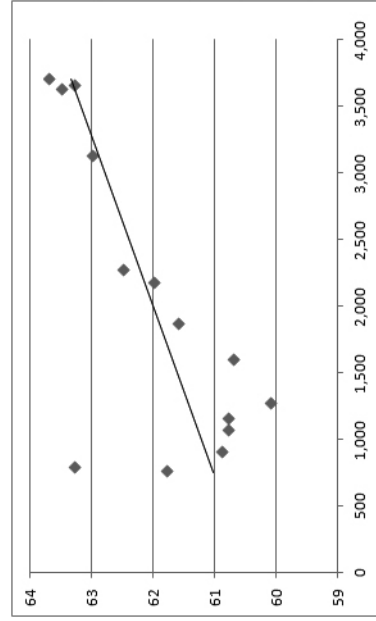
〈그림 5-2〉 인도네시아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5-3〉 인도네시아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5-4〉 인도네시아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National Socio Economic Survey Consumption Module;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7. 베네수엘라

〈표 7〉 베네수엘라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4,785.2	45.31	42	77	101.0	101.9	100.1	56.9	72.0	41.9
2001	4,928.2	28.45	44	77.5	104.1	105.1	103.1	58.9	73.0	44.8
2002	3,657.2	33.21	45	..	106.8	107.8	105.7	57.9	71.4	44.4
2003	3,234.0	36.47	44	..	105.0	106.1	103.9	56.8	70.9	42.7
2004	4,273.4	33.12	43	78.4	105.0	106.1	103.8	57.3	71.5	43.1
2005	5,435.9	35.49	45	82.2	104.6	105.6	103.5	58.9	73.4	44.5
2006	6,740.2	32.52	41	83.3	104.3	105.5	103.1	59.5	74.1	45.0
2007	8,325.2	38.69	39	84.4	106.0	107.4	104.6	60.2	74.4	46.0
2008	11,224.6	45.21	38	..	103.1	104.4	101.7	60.8	74.8	46.9
2009	11,534.8	46.97	..	69.6	103.2	104.6	101.8	60.1	73.5	46.7
2010	13,581.4	39.04	36	69.6	102.5	104.0	101.0	59.3	72.8	45.9
2011	10,754.6	34.88	..	73.5	102.1	103.5	100.7	59.5	73.2	46.0
2012	12,771.6	30.78	..	74.8	102.1	103.2	100.9	59.7	73.3	46.3
2013	12,265.0	29.36	..	76.4	102.4	103.2	101.5	60.2	73.6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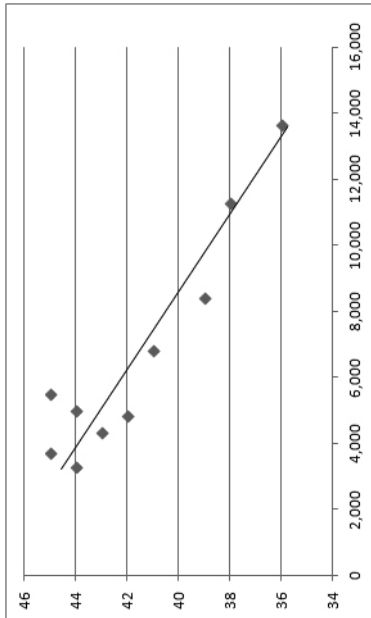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베네수엘라의 GDP는 2000년 4,785달러에서 2003년 3,234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2010년 13,581달러로 꾸준히 성장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지니계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증가(42→45)한 후 다시 36으로 감소하였다. HDI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취학률은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녀 간 격차 역시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전체고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녀 간 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폭은 매우 큰 것(2013년 기준 26.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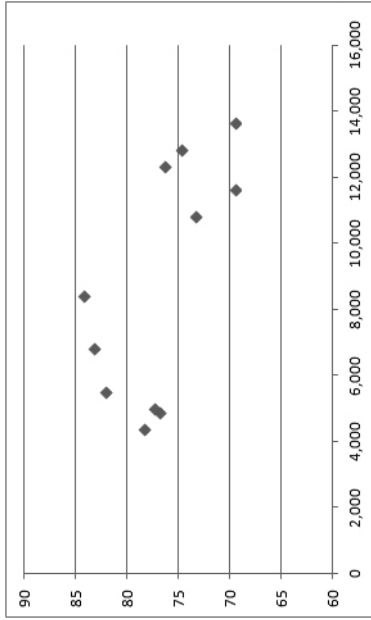
베네수엘라의 경우 GDP 2000년에서 2003년까지 GDP가 약 1,000달러 감소하는 동안 지니계수는 상승(42→45)하였고, 2010년까지 약 10,000달러 증가하는 동안 지니계수는 감소(36)하여 불평등 요소가 경제성장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률의 경우 남녀 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베네수엘라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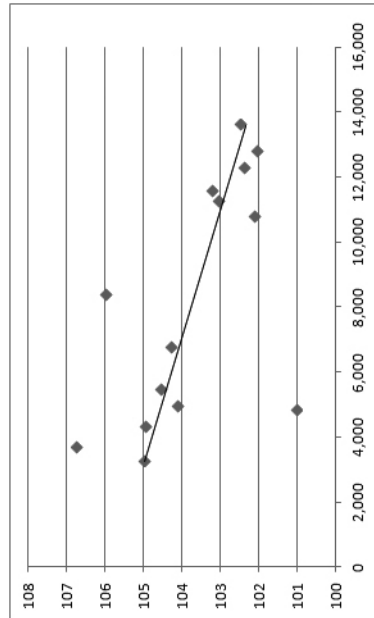
〈그림 6-1〉 베네수엘라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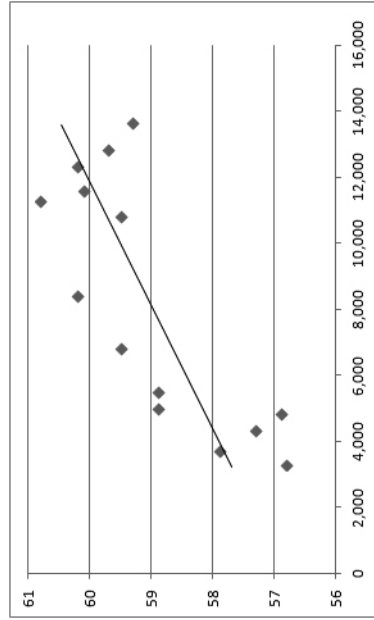
〈그림 6-2〉 베네수엘라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6-3〉 베네수엘라의 취업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6-4〉 베네수엘라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8. 브라질

〈표 8〉 브라질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3,738.7	209.34	..	75.7	..	..	..	61.7	75.8	48.3
2001	3,136.5	209.94	57	77.7	..	..	..	61.5	75.4	48.2
2002	2,810.2	217.58	57	..	..	..	..	62.4	75.7	49.7
2003	3,044.3	263.72	56	..	..	..	..	62.0	75.1	49.6
2004	3,598.0	259.86	55	79.2	..	..	..	63.3	76.3	50.9
2005	4,733.2	259.13	55	80.5	..	..	..	63.7	76.3	51.7
2006	5,809.1	270.17	54	80.8	..	..	..	64.0	76.5	52.2
2007	7,241.1	354.2	53	81.3	..	..	..	63.9	76.3	52.0
2008	8,700.6	348.99	53	..	..	..	..	64.7	77.2	52.9
2009	8,462.4	368.18	52	69.3	..	..	..	64.0	76.2	52.3
2010	11,124.1	356.54	..	69.9	..	..	..	64.5	76.4	53.2
2011	13,042.2	365.76	..	71.8	..	..	..	65.3	77.0	54.1
2012	11,922.7	424.64	..	73	..	..	..	65.6	77.2	54.6
2013	11,711.1	1030.02	..	74.4	..	..	..	65.6	77.1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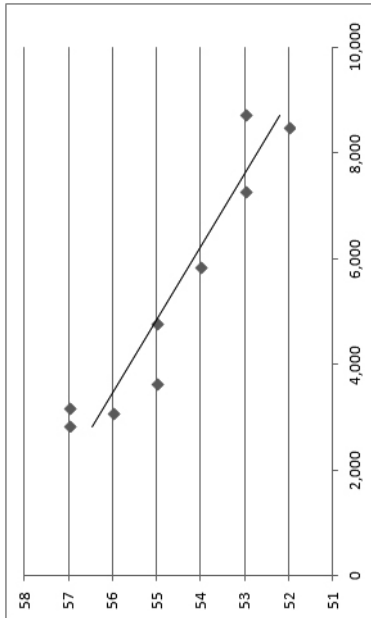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브라질의 GDP는 2000년 3,739달러에서 2002년까지 약 1,000달러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은 13,042달러까지 오르고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3년에는 11,711달러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57→52)하였다. HDI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학률에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 고용률은 소폭(3.9%)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였고, 남녀 간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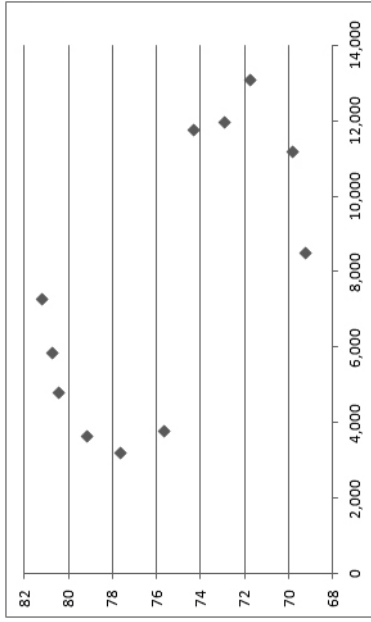
브라질은 GDP의 상승에 따라 불평등 요소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개발지수와 관련된 요소들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다. 전체고용률의 경우 점차 상승함과 동시에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들어 고용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요소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브라질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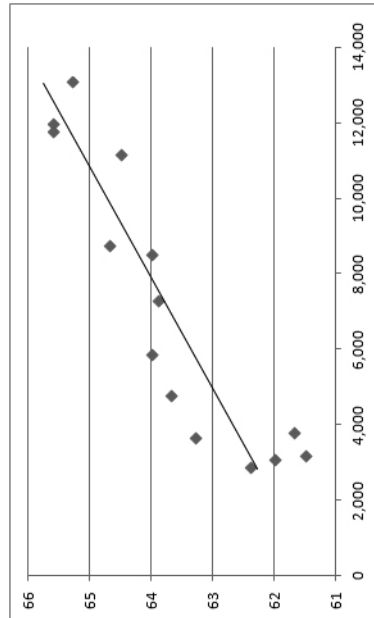
〈그림 7-1〉 브라질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7-2〉 브라질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7-3〉 브라질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9. 에콰도르

〈표 9〉 에콰도르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451.3	136.77	54	73.2	112.9	113.2	112.5	62.0	79.1	45.0
2001	1,903.7	151	..	73.1	114.2	114.2	114.1	65.5	80.9	50.3
2002	2,184.0	198.85	..	..	115.2	115.3	115.1	64.3	79.8	49.0
2003	2,440.5	199.62	53	..	114.8	114.9	114.7	62.6	78.1	47.2
2004	2,708.6	227.95	52	76.5	114.1	114.3	113.9	66.3	80.3	52.4
2005	3,021.9	270.63	52	..	113.7	114.0	113.5	65.3	80.3	50.5
2006	3,350.8	212.35	52	80.5	113.3	113.6	113.0	66.6	81.5	51.9
2007	3,590.7	214.75	52	80.6	114.2	114.4	114.1	65.6	80.9	50.5
2008	4,274.9	245.37	48	..	..	..	..	63.9	79.7	48.2
2009	4,255.6	212.18	47	69.2	110.5	109.8	111.3	63.2	78.2	48.4
2010	4,657.3	188.56	47	69.5	114.3	114.3	114.2	64.6	79.2	50.2
2011	5,223.4	178.82	..	72	114.7	114.8	114.6	65.3	79.9	51.0
2012	5,682.6	150.35	..	72.4	113.6	113.6	113.5	65.6	80.0	51.4
2013	6,032.2	133.28	..	71.1	112.0	111.8	112.2	65.7	80.1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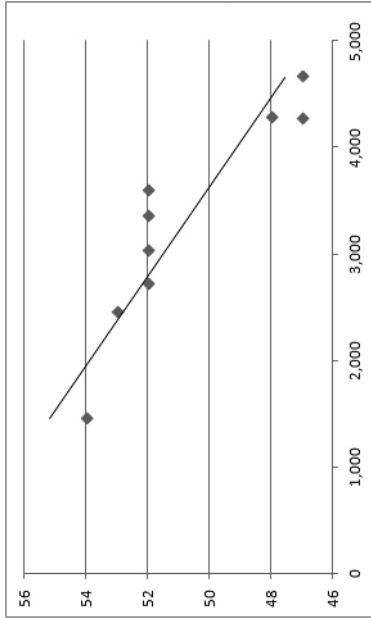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에콰도르의 GDP는 2000년 1,451달러에서 2013년 6,032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54→47)하는 모습을 보였다. HDI는 2012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전체취학률의 경우 큰 변화는 없고 남녀 간 격차도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여학생의 취학률이 역전하기도 하였다. 전체 고용률은 소폭 상승(3.7%)하였고 남녀 간 격차 역시 약간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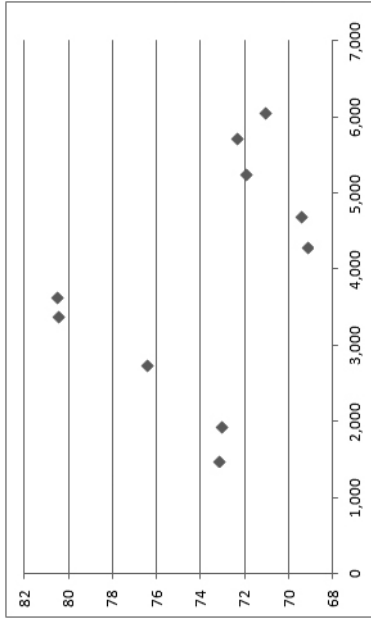
에콰도르는 GDP 상승에 따라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불평등 요소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와 관련된 요소들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률에 있어서는 남녀 간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에 대한 차별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지만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다소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에콰도르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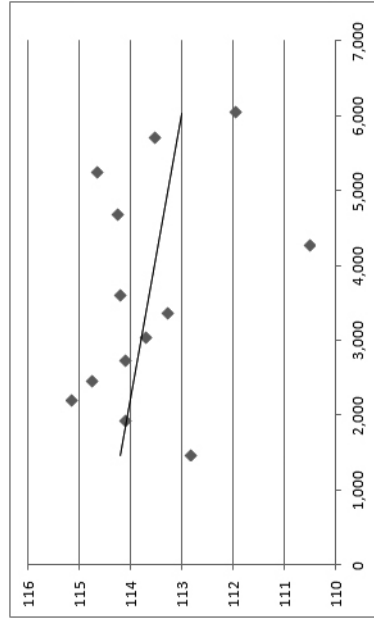
〈그림 8-1〉 에콰도르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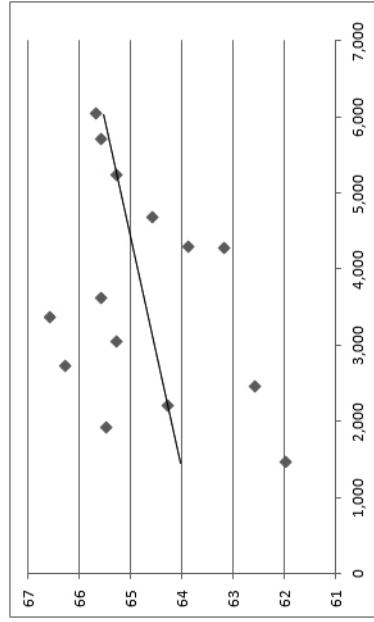
〈그림 8-2〉 에콰도르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8-3〉 에콰도르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8-4〉 에콰도르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10. 칠레

〈표 10〉 칠레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5,229.2	63.72	54	83.1	100.0	101.2	98.8	49.7	68.2	31.9
2001	4,709.9	63.73	..	83.1	..	..	..	49.1	67.6	31.3
2002	4,566.5	63.09	..	83.1	98.6	99.8	97.4	48.8	67.2	31.2
2003	4,948.7	65.75	53	..	97.9	99.2	96.7	49.5	67.3	32.4
2004	6,323.8	73.34	..	85.9	102.7	105.1	100.2	49.9	67.1	33.4
2005	7,728.6	72.91	..	87.2	103.4	105.8	101.0	50.9	67.9	34.5
2006	9,500.8	58.14	51	87.4	104.6	107.0	102.1	51.6	68.5	35.3
2007	10,513.5	59.51	..	87.8	106.1	108.7	103.4	52.5	68.9	36.6
2008	10,791.0	69.64	..	..	106.8	109.5	103.9	53.3	69.0	38.1
2009	10,217.3	72.47	51	77.9	105.4	108.0	102.7	52.1	66.7	38.0
2010	12,785.1	109.01	..	78.3	102.2	103.7	100.7	55.4	69.1	42.3
2011	14,582.2	64.63	..	80.5	101.5	103.1	99.8	57.2	70.4	44.5
2012	15,253.3	70.87	..	81.9	101.2	102.8	99.6	57.6	70.6	45.1
2013	15,741.7	66.12	..	82.2	99.7	101.2	98.1	58.1	70.8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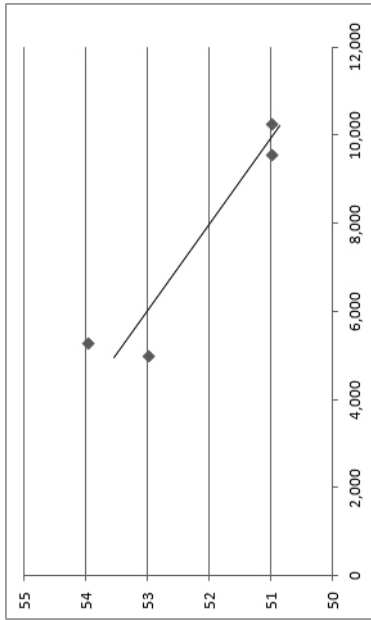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칠레의 GDP는 2000년 5,229달러에서 2002년 4,569달러로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15,742달러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지니계수의 경우 2000년 54에서 2009년 51로 감소하였다. HDI는 2004년부터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취학률은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취학률이 증가할 때는 남녀 간 격차가 벌어졌고 감소할 때는 격차가 줄어들었다. 전체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49.7%→58.1%)하였고, 남녀 간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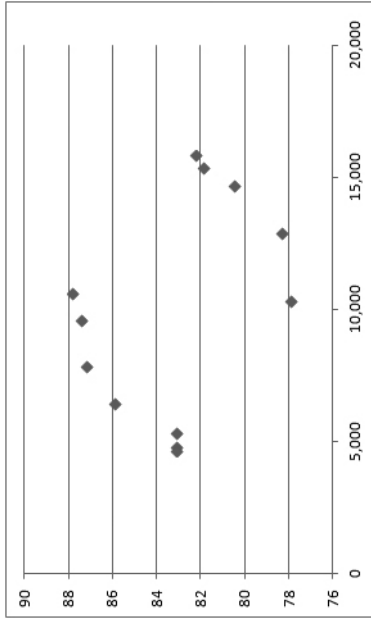
칠레 역시 GDP 상승에 따라 불평등 요소, 인간개발 요소가 함께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취학률의 경우 남녀 간 격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여학생의 취학률이 100% 미만인 것, 전체적인 취학률 증가와 여학생의 취학률 증가가 비례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률의 남녀 간 격차는 2000년 36.3%에서 2013년 25%로 감소하여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 간 격차가 크고 여성의 고용률이 50% 미만에 그치고 있어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칠레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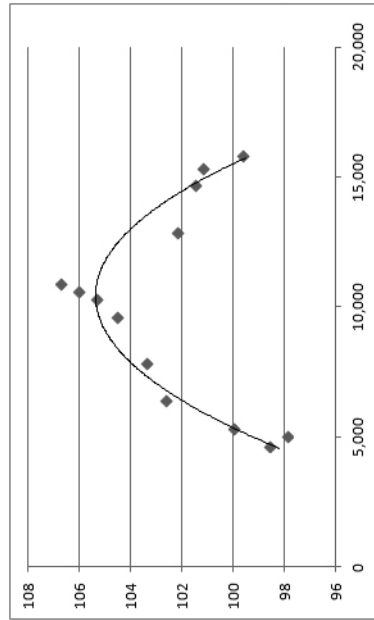
〈그림 9-1〉 칠레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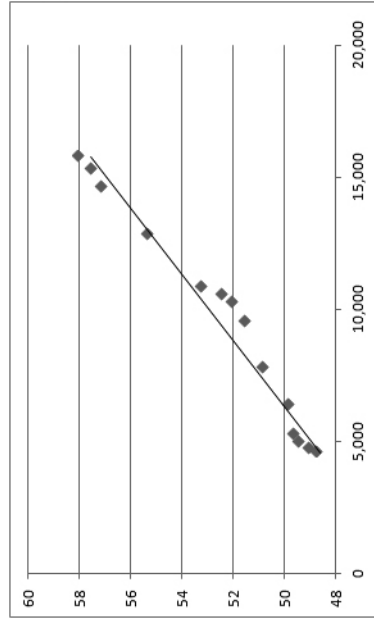
〈그림 9-2〉 칠레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9-3〉 칠레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9-4〉 칠레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11. 파나마

〈표 11〉 파나마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3,836.7	26.71	53	78.7	104.7	106.3	103.0	54.9	72.5	37.0
2001	3,825.1	27.04	54	78.8	105.7	107.3	104.0	54.6	72.0	37.0
2002	3,902.5	32.22	54	..	107.5	109.2	105.7	55.0	72.1	37.7
2003	4,038.5	46.12	54	..	106.1	107.8	104.3	55.6	72.6	38.3
2004	4,348.7	34.93	53	80.9	107.0	108.5	105.4	56.8	74.1	39.3
2005	4,659.0	28.05	52	82.9	105.5	107.1	103.7	58.3	74.9	41.5
2006	5,072.2	40.52	53	83.4	105.6	107.1	103.9	58.2	75.2	41.0
2007	6,142.9	35.34	..	84	106.4	108.0	104.7	60.2	76.9	43.2
2008	7,112.4	38.15	..	..	105.0	106.7	103.2	62.2	79.3	44.8
2009	7,283.6	40.02	49	75.1	103.1	104.8	101.3	61.7	78.2	45.0
2010	7,958.6	30.82	49	75.5	102.2	104.0	100.3	61.2	77.6	44.6
2011	9,036.0	33.79	..	76.8	101.4	102.9	99.9	62.6	78.5	46.4
2012	10,138.5	28.83	..	78	100.3	101.8	98.8	62.9	79.1	46.5
2013	11,206.4	32.39	..	76.5	99.6	100.9	98.2	62.8	79.0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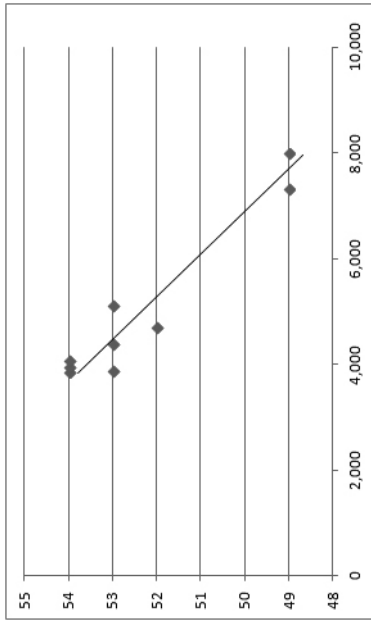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파나마의 GDP는 2000년 3,837달러에서 2013년 약 11,206달러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약 5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인간개발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취학률의 경우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2013년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다. 취학률에 있어 남녀 간 격차는 약 3%p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증가(7.9%)하였고, 남녀 간 격차에 있어서는 약간 감소(3%)하였지만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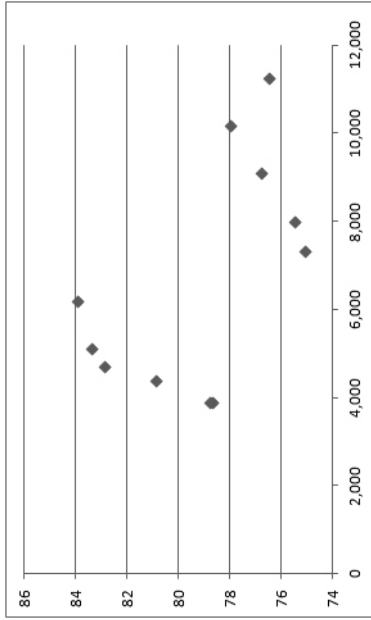
파나마는 GDP 성장에 따라 불평등 요소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인간개발지수와 관련된 요소도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학률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여성의 취학률이 100% 미만이라는 점, 고용률 역시 남녀 간 격차(2013년 기준 32.5%)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0〉 파나마 경제성장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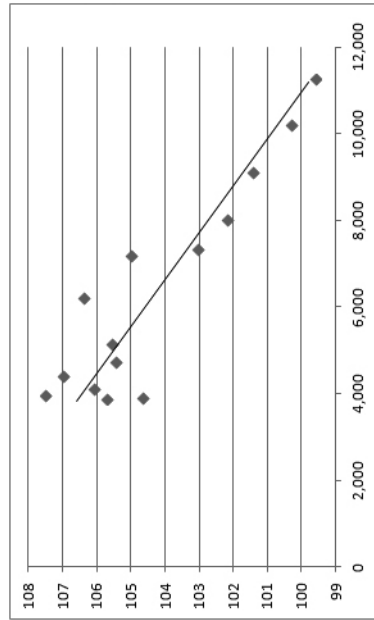
〈그림 10-1〉 파나마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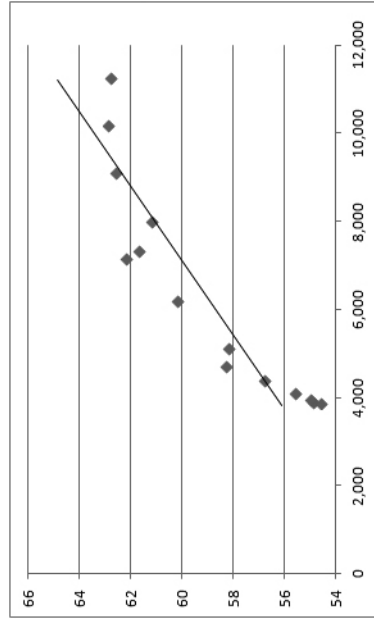
〈그림 10-2〉 파나마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0-3〉 파나마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0-4〉 파나마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SEDLAC(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12. 벨라루스

〈표 12〉 벨라루스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273.0	..	24.7	..	111.6	112.4	110.8	54.6	60.0	50.1
2001	1,244.4	..	24.5	80.4	113.3	114.0	112.6	54.2	59.4	49.8
2002	1,479.5	..	24.6	..	111.2	112.0	110.5	53.8	58.8	49.5
2003	1,819.5	..	24.9	..	101.5	102.0	100.9	53.4	58.5	49.1
2004	2,378.4	..	24.8	79.4	99.2	100.7	97.6	53.1	58.2	48.8
2005	3,126.4	40.95	23.8	81.2	97.6	99.1	95.9	52.8	57.9	48.4
2006	3,848.6	50.43	27.9	81.9	98.4	99.4	97.4	52.4	57.6	48.0
2007	4,736.0	68.91	..	82.6	100.8	101.6	100.1	52.0	57.2	47.7
2008	6,376.2	82.21	..	..	103.9	104.1	103.6	51.7	57.0	47.3
2009	5,176.0	81.83	..	72.9	105.0	105.3	104.6	51.3	56.5	46.9
2010	5,818.9	102.11	..	73.2	103.4	103.5	103.3	51.7	57.1	47.2
2011	6,305.8	86.95	..	75.6	101.2	101.3	101.1	52.1	57.6	47.5
2012	6,721.8	65.75	..	79.3	99.1	99.1	99.2	52.4	58.1	47.7
2013	7,722.1	68.13	..	78.6	97.7	97.6	97.9	52.7	58.5	48.0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Transmonee(2004, 2005, 2007, 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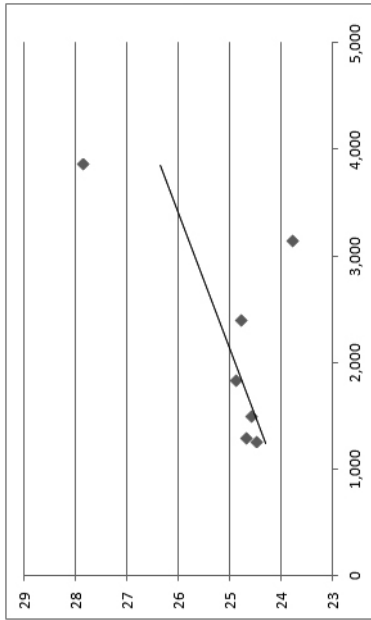
벨라루스의 GDP는 2000년 1,273달러에서 2013년 7,722달러까지 올라 6배 넘는 큰 성장을 하였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지니계수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HDI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전체 취학률의 경우 2005년까지 감소, 2009년까지는 증가,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녀 간 격차는 2000년 1.6%였지만 2005년까지 3.2%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꾸준히 감소하여 오히려 여학생의 취학률이 역전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고용률은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지만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의 고용률에 있어서는 모두 낮은

수준이었고, 남녀 간 격차에 있어서도 9-10%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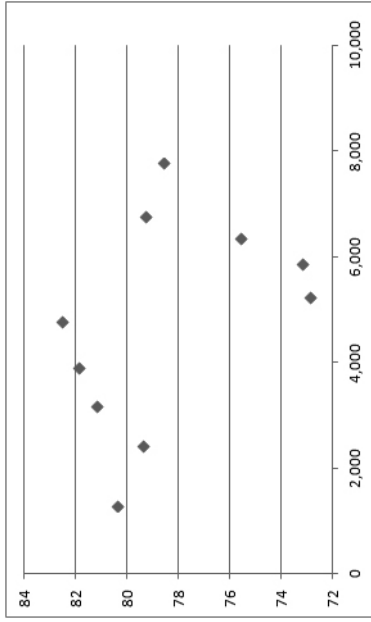
벨라루스는 GDP는 성장에 따라 인간개발지수 관련 요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평등 요소는 큰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취학률에 있어서의 남녀 간 격차는 상쇄되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2013년 기준 48%)이 남성의 고용률(2013년 기준 58.5%)보다 낮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벨라루스 경제성장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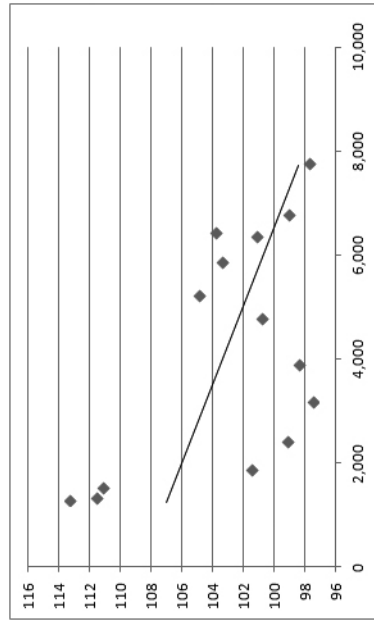
〈그림 11-1〉 벨라루스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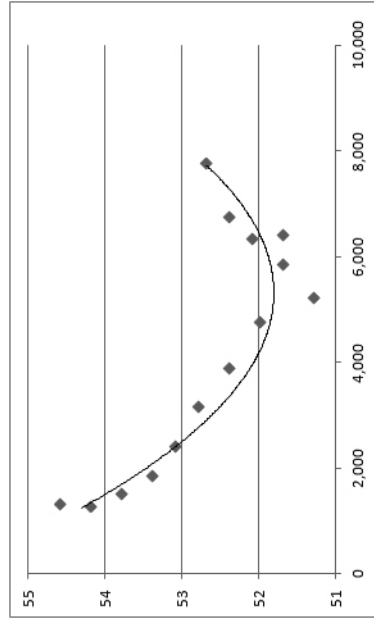
〈그림 11-2〉 벨라루스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1-3〉 벨라루스의 취학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1-4〉 벨라루스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Transmonnee(2004, 2005, 2007, 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13. 세르비아

〈표 13〉 세르비아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870.1	577.74	..	..	103.6	104.1	103.1	47.8	57.7	38.4
2001	1,634.9	626.75	..	..	102.5	102.6	102.4	47.7	57.5	38.4
2002	2,148.9	1817.79	31.1	..	102.1	102.4	101.8	47.1	56.8	38.0
2003	2,832.5	841.07	32	..	101.1	101.0	101.1	46.4	55.9	37.4
2004	3,331.2	576.62	33	..	101.6	101.5	101.6	44.6	53.9	35.8
2005	3,528.1	762.53	31.3	81.7	102.7	102.5	103.0	43.3	52.5	34.7
2006	4,129.8	1166.84	34.7	82.1	101.8	101.9	101.8	43.3	52.6	34.5
2007	5,458.1	458.61	32	82.6	101.1	101.1	101.0	45.0	53.8	36.7
2008	6,701.8	524.36	32.7	..	100.6	100.7	100.5	47.2	55.9	39.1
2009	5,821.3	205.9	..	73.3	97.7	98.2	97.2	44.2	52.6	36.4
2010	5,411.9	252	..	73.5	95.9	96.1	95.6	41.9	50.3	34.1
2011	6,423.3	200.71	..	76.6	94.9	95.1	94.7	40.1	48.5	32.2
2012	5,659.4	185.35	..	76.9	93.0	93.1	92.9	39.8	48.2	31.9
2013	6,353.8	150.98	..	74.5	100.9	100.9	100.9	40.8	49.2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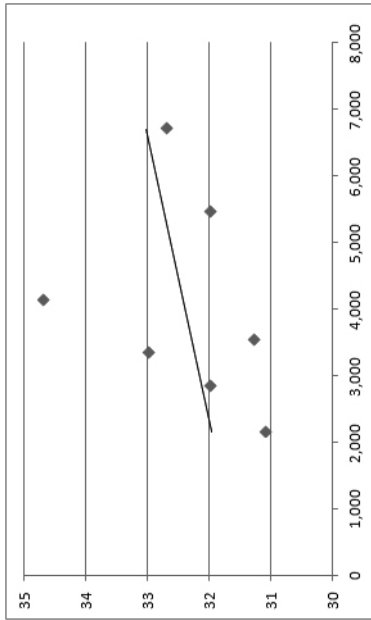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Transmonee(2008,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세르비아의 GDP는 2000년 870달러였지만, 2008년 약 6,702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6,000달러를 전후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1~34 정도에 머물렀다. 인간개발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하였다. 전체 취학률은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93%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에는 다시 100%를 초과하였고, 남녀 간 격차는 1% 이하를 보이며 여성의 취학률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체 고용률에 있어서는 2000년 47.8%에서 2013년 40.8%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남녀 간 격차에 있어서는 19.3%에서 16.3%로 약간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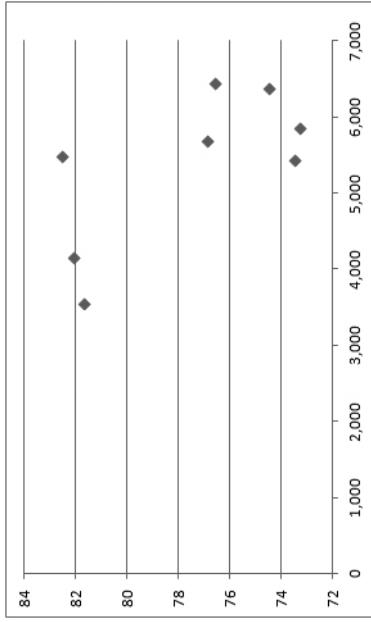
세르비아는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불평등 요소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인간개발지수와 관련된 요소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하였다. 취학률에 있어서의 남녀 간 격차는 크게 변한 바 없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 역시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반대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아(2013년: 16.3%) 여전히 불평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세르비아 경제성장률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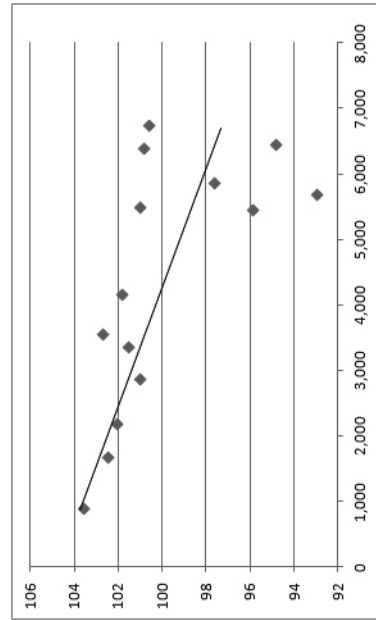
〈그림 12-1〉 세르비아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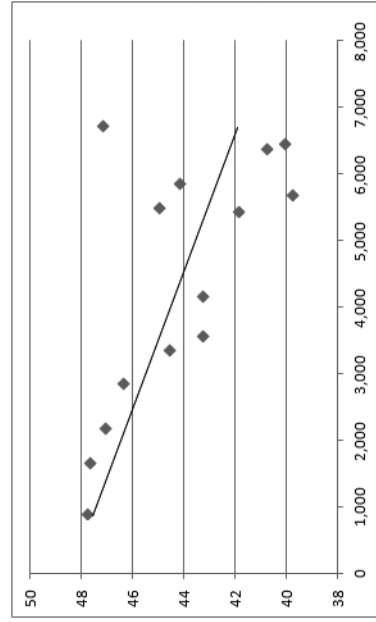
〈그림 12-2〉 세르비아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2-3〉 세르비아의 취약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2-4〉 세르비아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Transmonnee(2008,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14. 카자흐스탄

〈표 14〉 카자흐스탄 경제성장 및 불평등 지수

년도	GDP(\$)	ODA(m\$)	Gini	HDI	취학률(%)			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229.0	95.1	..	75	98.7	98.1	99.4	61.2	68.6	54.7
2001	1,490.9	91.38	41.1	76.5	101.8	101.7	101.9	62.9	69.9	56.8
2002	1,658.0	101.85	35	..	103.5	103.4	103.6	63.8	70.3	58.1
2003	2,068.1	86.43	32.3	..	104.5	104.3	104.7	63.8	70.2	58.1
2004	2,874.3	96.1	..	77.4	105.2	105.0	105.4	63.5	69.9	57.9
2005	3,771.3	90.07	..	79.4	104.2	104.1	104.3	64.0	70.4	58.2
2006	5,291.6	81.92	..	80	103.0	102.9	103.1	64.5	70.7	59.0
2007	6,771.4	114.08	30.9	80.4	103.3	103.5	103.1	65.2	71.2	59.9
2008	8,513.6	204.75	29.3	..	106.0	106.3	105.6	66.2	71.8	61.1
2009	7,165.3	146.12	29	71.1	105.5	105.7	105.2	66.5	71.9	61.6
2010	9,070.6	112.24	..	71.4	104.6	104.4	104.7	67.4	73.0	62.3
2011	11,357.9	58.88	..	74.5	104.7	104.4	105.1	68.0	73.7	62.9
2012	12,120.3	57.6	..	75.4	104.9	104.3	105.6	68.4	74.3	63.1
2013	13,611.5	61.5	..	75.7	106.3	105.5	107.0	68.7	74.7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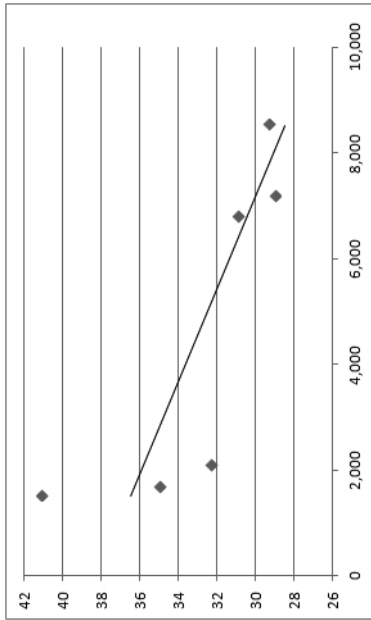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카자흐스탄의 GDP는 2000년 1,229달러에서 2013년 13,612달러로 10배 넘는 상승을 하였다. 지니계수의 경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41→29)하였다. HDI 역시 꾸준히 상승하였다. 전체 취학률의 경우 2007년까지 상승하다 약간 감소한 후 이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녀 간 격차의 경우 기간 중 대부분 오히려 여학생의 취학률이 약간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전체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상승(61.2%→68.7%)하였고, 남녀 간 격차는 2000년 13.9%에서 2013년 11.2%로 다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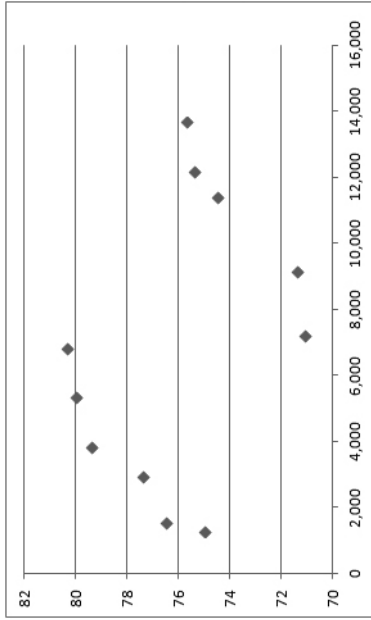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불평등 요소가 꾸준히 완화되며 인간개발 지수와 관련된 요소 역시 꾸준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취학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률은 여성의 고용률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지만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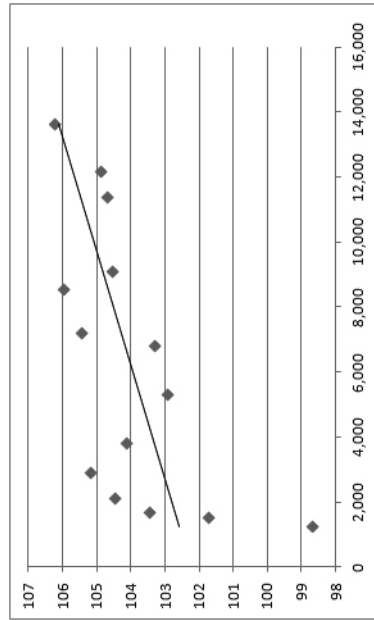
〈그림 13-1〉 카자흐스탄의 지니계수와 1인당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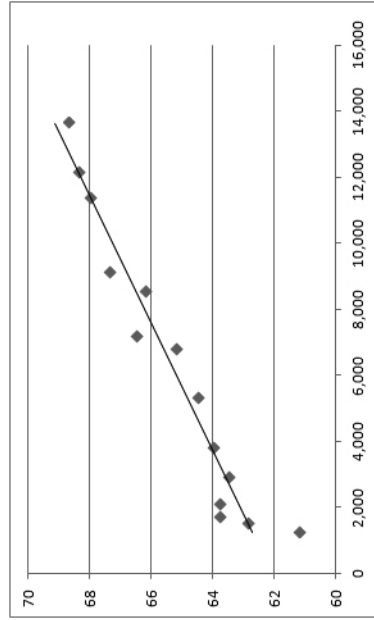
〈그림 13-2〉 카자흐스탄의 HDI와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3-3〉 카자흐스탄의 취업률과 1인당 GDP의 관계



〈그림 13-4〉 카자흐스탄의 고용률과 1인당 GDP 관계



출처: data.worldbank.org; stat.oecd.org;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uman Development Report 토대로 저자 작성

IV. 포용적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사례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용적 성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의 필요조건이며, 이는 경제 성장을 넘어 소득불평등,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 성장을 의미한다. 포용적 성장이 다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하는 만큼 이를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어 왔다. 포용적 파트너십이란 단순히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결합형식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듯 개발협력 분야에서 개발의 다면성과 포용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포용적 파트너십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남미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용적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역할 및 효과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포용적 파트너십을 위한 조건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브라질의 Pro Uni (University for All)

1) 배경 및 프로그램 개요

브라질은 18-24세의 대학 입학률이 15% 미만이며 빈곤 지역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10%에 불과한데, 이는 인근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WEF, 2014:18).⁸⁾ 고등교육과 국가의 경제 및 생산성 향상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 따라, 브라질은 2020년까지 대학 등록률 33% 달성을 국가 교육 계획 목표 중 하나로 두고 고등교육 이수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브라질 교육부의 “University for all (Pro Uni)” 프로그램이다.

8) 2013년 Global Innovation Index (GII)의 대학등록률 부문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각각 14위와 23위를 차지한 반면 브라질은 8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볼리비아나 파라과이와 같은 저소득국가의 대학등록률보다 더 낮은 순위이다.

Pro Uni 프로그램은 사립 대학교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2004년 브라질 교육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는 법률 제 11096조항으로 ‘Pro Uni’를 설립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신청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고 가계 수입이 월 \$440.89 이하인 경우 전액 장학금을, 가계수입이 월 \$881.78이하인 경우에는 25-50%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장학금 수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입학 자격시험으로 활용되는 ENEM (National Assessment of Secondary Education)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나아가 Pro Uni는 프로그램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연간 사회정보 보고서 (Annual Social Information Report, RAIS), 국가 자가용 등록부, 대학관리 통합 플랫폼 (Integrated Platform for the Management of Federal Universities, Pinglfes), 정부의 대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교차 점검을 통해 해당 학생의 장학금 수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동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무료 인터넷 제공을 지원한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립 교육기관은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Pro Uni 지원 과정 동안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외에도 브라질 교육부는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와도 무료 인터넷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Pro Uni 지원 과정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Pro Uni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기간동안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외에도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매달 \$130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50%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담보 용자 없이 나머지 장학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듯, Pro Uni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 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참여주체 및 역할

Pro Uni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교육 이수를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브라질 교육부가, 민간 부문에서는 사립대학 기관이 주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우선 사립대학기관은 Pro Uni 선발 과정을 통해 선별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브라질 교육부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당 교육기관에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장학금 재원이 브라질 정부에서 사립대학으로 넘어가서 학생에게 전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사립대학이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소득세 (IRPJ)와 같은 세금 면제 이외에도 참여 기관들은 사회안보재원 (COFINS), 사회통합프로그램 (PIS)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무도 면제 받는다. 브라질의 조세 부담이 36.27%에 달한다는 브라질 조세기획기관 (Brazilian Institute for Tax planning)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은 사립대학들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총 3억2천5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면제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약 17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조사되었다 (WEF, 2014:19-20).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사립학교 증가 및 정원미달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2002년 기준, 브라질 공립대학은 195개인 반면 사립대학은 1637개였으며, 정원미달률 또한 공립대학은 5%인 반면 사립대학은 37.5%에 달했다. 따라서 Pro Uni는 저소득층 학생 뿐 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립 기관에게도 참여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파트너십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한편, Pro Uni는 장학금 이외에도 학생들의 생활비 제공 등 기타 재정지원도 포함한다. 따라서 브라질 교육부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브라질의 가장 큰 국가 금융기관인 Caixa Economic Federal 및 브라질연방은행연합 (Brazilian Federation of Banks, FEBRABAN), 학생지원펀드 (FIES) 등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Caixa Economic Federal 및 브라질연방은행연합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생활비를 벌며 동시에 추후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인터넷 제공 또한 본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는 정부기관, 사립대학, CSO 등 다양한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교육교류 비영리 위원회 (non-profit-making Council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CIEE)는 국가 토착민 재단 (National Indian Foundation, FUNAI), e-정부지원 서비스 (Citizen E-Government Assistance Service, GESAC) 등 브라질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인터넷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돕는다. 한편,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모든 프로그램 지원자에게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무료 인터넷 제공은 저소득층들의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할 뿐 만 아니라 진학 후 학생들의 학업 지원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표 15〉 Pro Uni 주요 참여주체 및 역할

참여주체	단체	역할
정부 (Public)	교육부	• Pro Uni 프로그램 설립 및 운영 – 학생선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민간기관과 주요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 – 참여 사립기관에 세금 및 사회적 기여 면제 – 다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턴십, 인터넷 제공 등 학업 지원 토대 마련
	Caxia Economic Federal	• Pro Uni 참여학생에게 인턴십 기회 제공 • 등록금 무담보 대출 지원
	국가토착민재단	• 무료 인터넷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학업지원
민간 (Private)	사립대학	• 장학금 지원 • 무료 인터넷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학업지원
	브라질연방은행연합 (FEBRABAN)	• Pro Uni 참여학생에게 인턴십 기회 제공 • 등록금 무담보 대출 지원
	국제교육교류 비영리위원회 (CIEE)	• 무료 인터넷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학업지원

출처: 저자 구성

3) 프로그램 성과

Pro Uni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2013년 첫 학기까지 총 180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57%는 전액장학금이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취업률 개선 및 가계소득증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68%가 가계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Pro Uni 이전에는 56%의 학생들만 일을 한 반면 프로그램 이후 80%의 학생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학생들의 실제 프로그램 만족도도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 2009년 3월 IBOPE (Brazilian Institute of Public Opinion and Statistics)에서 1200명의 장학금 혜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99%의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Pro Uni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Pro Uni 프로그램의 성과는 참여 사립대학 증가로도 알 수 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립기관은 2005년 1142개에서 2010년 13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정부에서 제공한 세금 면제 혜택 등 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사립대학에게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이러한 세금 면제 혜택은 실제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방조세사무소 (Federal Revenue Office)와 Pro Un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래로 프로그램 수혜자 당 비용은 대략 130달러 정도이다. 특히 2006년에는 장학금 비용이 500달러였던 반면, 2012년에는 110달러로 급격히 감소되었다.⁹⁾

한편, 이러한 Pro Uni 프로그램의 긍정적 성과에는 브라질 정부 주축의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간 사회정보 보고서 (Annual Social Information Report, RAIS), 국가 자가용 등록부 등 정부의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교차 점검을 통해 장학금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통해 2009년 11월에 총 1766개의 장학금 지원 사례가, 2010년에는 4232개의 사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지원을 종료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비율은 전체 사례 중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지만, 이러한 자정 작용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9) 단 2011년 이전까지 측정된 세금 면제 규모는 실제 장학금 지원 금액이 아닌 사립대학에서 제공한 장학금 횟수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실제 장학금 지원 금액을 기반으로 산출되도록 개선되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브라질 교육부는 2014년 교육부 법령 개정을 통해 Pro Un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 소지가 의심될 경우 학생들에게 10일 안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4) 시사점

동 프로그램은 낮은 대학 교육 이수율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파트너십을 주축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은행, 시민단체, 타 정부부처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학생들의 취업률 및 대학이수율 제고, 가계 소득 증대 등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운영에는 무엇보다 각 주체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즉 공공과 민간, 그리고 수혜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바탕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교육부는 대학 교육 이수율 제고의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사립대학은 세금 감면의 혜택 및 등록미달률 개선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인턴십 기회 제공, 생활비 지원, 인터넷 무료 제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반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은행,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이 바탕이 되었다. 나아가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만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교차 점검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의 인력난은 대다수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국가의 개발에 있어 우수한 인력 확보는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Pro Uni 프로그램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용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프로그램의 핵심인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이수율 제고는 포용적 성장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2. 여성을 위한 양질의 고용 창출 (Promotion of Productive Development through the Inclusion of Women in Quality Employment in Central America)

1) 배경 및 소개

최근 중남미 지역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은 사회적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있다. 특히 성평등과 관련하여 교육 접근성에 있어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및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남미 지역의 여성고용률은 남성 고용률의 61%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폭 오르긴 하였지만 여전히 65%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여성 취업인구 중 52.5%가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 반해 남성은 44.1%에 불과하였다 (CEPAL, 2015: 42).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대부분의 가사노동 및 육아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중남미의 현실을 들 수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특성상 여성들에게 임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빈곤에 취약해지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은 개인이나 일부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챕터에서 소개할 예정인 이니셔티브는 중미 여성들에게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동 이니셔티브는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산하 여성부 (Gender Affairs Division)와 독일 원조기관인 BMZ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파나마와 페루에도 도입되어 이행 중에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특징은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순히 정부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이 다양한 섹터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학계, 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있다. 즉, 각 이해관계자들의 강점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여성 고용에 대한 대화와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요 행위자 혹은 주체를 선정한 후, 국가 워크숍을 통해 현재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모든 섹터와 학제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통 아젠다를 수립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은 민관협력을 포함한 다학제적인 접근법(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토대로 양질의 여성 고용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다양한 주체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동 이니셔티브는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를 목표로 2013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컨퍼런스에서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나마와 페루에 확산, 시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처음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된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와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참여 주체 및 활동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 이니셔티브의 특징에 따라 현재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양질의 여성 고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코스타리카의 경우 아래 <표 16>과 같이 다양한 공공, 민간 분야의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경제산업무역부, 국가여성협회(National Women's Institute, INAMU) 농림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후 이행 과정에서 과학기술통신부와 노동사회보장부도 참여하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월마트, 인텔 등 다국

〈표 16〉 코스타리카의 분야별 주요 참여 주체

분야	참여주체
공공 (Public)	• 경제산업무역부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Trade, MEIC) • 국가여성협회 (National Women's Institute, INAMU) •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 과학기술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MICITT) • 노동사회보장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민간 (Private)	• 월마트, 인텔 • 상공회의소, 기술회의소, 산업회의소 • 여성지도자협회, 개발사업협회 등

출처: 저자 구성

적 기업뿐 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술회의소, 산업회의소, 여성지도자협회, 개발사업협회 (Business Association for Development) 협회, 기업가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13년 2월, 약 40여명의 공공, 민간영역 대표들이 모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스타리카 경제에서의 여성 역할과 양질의 고용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해 논의하며,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경제부, 농림부, INAMU와 주요 민간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5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공공과 민간 간의 대화와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약 3-40명의 대표들이 모였던 4차 회의에서는 현재 코스타리카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 협회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여성 기업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공공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 약 800건 이상의 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잠재적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접근성 개선과 정보의 체계적인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을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도 코스타리카와 마찬가지로 <표 17>에서와 같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제부, 엘살바도르 여성 개발 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Salvadoran Women, ISDEMU)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상공회의소, 산업회의소와 함께 주

〈표 17〉 엘살바도르의 분야별 주요 참여 주체

분야	참여주체
공공 (Public)	•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엘살바도르 여성 개발 기관(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Salvadoran Women, ISDEMU) • 대통령 산하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
민간 (Private)	• 상공회의소, 산업회의소 • 주요 시민사회 행위자

출처: 저자 구성

요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참여해 양질의 여성 고용 보장을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프로젝트는 경제부와 ISDEMU 주도로 2013년 3월 시작되었다. 이후 타 부처 및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하여 약 4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여성의 경제능력 증진을 위해 이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여성 경제 자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3) 성과

여성 고용률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은 단순히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분야 및 사회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에서 이행된 동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참여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경우 위의 과정을 통해 정부, 학계, 금융, 기업, 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여개의 프로젝트 지원 네트워크가 창설되었다. 또한 파일럿(pilot) 프로젝트에 40여명의 여성을 참여시킴으로써 향후 양질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시행될 타 프로젝트들의 이행 계획을 더욱 견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도 양질의 여성 고용 창출 정책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진행된 수차례의 회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 공유하였다.

한편,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제12회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여성 컨퍼런스(The XII Regional Conference on Women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에서 위의 경험들과 교훈들을 타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였다. 그 결과 파나마와 페루가 ECLCA에게 자국에도 동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파나마와 페루에도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앞선 두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주체가 모

여 회의를 통해 양질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페루의 경우 여성 및 취약계층부 (Ministry of Women and Vulnerable Populations), 생산부 (the Ministry of Production), 국제무역 및 관광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tourism), 노동 및 고용촉진부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Promotion),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장관들이 모여 이니셔티브 도입에 협력하겠다는 이행 약속에 서명과 함께 리마 상공회의소 및 수출협회, 여성기업가협회 간 양자 회담이 열리기도 하였다. 나아가 직접적인 참여를 요청한 파나마와 페루 이외에도, 컨퍼런스 참여자들 간 양질의 여성 고용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와 환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산토도밍고 합의 (Consensus of Santo Domingo) 제 68조¹⁰⁾에 여성의 고용 지원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4) 시사점

성차별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빈곤을 유발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이 취약 계층에 속해있음을 고려할 때, 성평등 달성은 개발과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제반의 환경 구축은 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경제적 자율권은 약화시켜 여성들의 빈곤 취약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은 다양한 섹터 및 주체 간의 지원이 뒷받침될 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이니셔티브가 추구하는 양질의 여성 고용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간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회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여성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 제68조: 여성부(Division for Gender Affairs)를 통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가치 사슬(value chain) 내 여성기업가, 여성생산자, 여성경영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기관간, 섹터간 접근법(integrated, inter-agency and intersectoral approach)을 도출 및 이행함으로써 생산력 증대 및 여성의 경제적 자율권을 촉진시킬 것을 중남미·카리브해 경제연합(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에 촉구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포용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질의 여성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질의 여성 고용 창출은 하나의 (one size fits all) 정책 혹은 주체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포용적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서 다양한 섹터와 사회 주체 간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공 정책을 도출해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V. 결론

앞서 살펴본 포용적 성장의 정의와 실재에 대해 요약하자면, 포용적 성장은 빈곤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단기적인 GDP 또는 GDP per capita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섹터에서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지 하에서 경제 다각화를 위한 구조개혁 등의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포용성이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비즈니스와 개인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범적인 환경에서의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포용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속도와 방식 (pattern)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빈곤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함께 포용적 성장 전략이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용적 성장은 소득의 재분배 보다는 생산적 고용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단순히 고용비율을 증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은 개별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기존의 GDP 또는 GDP per capita가 가구 (household) 중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에의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포용적 성장은 친빈곤적 성장의 상대적 측면 보다는 절대적 측면과 동일한 선상에 있으며, 이에 따라 포용적 성장의 달성은 고용창출,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루어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목표는 잠재적 성과 (outcome)이지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인 선택을 통해 중재자 또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은 단순히 향후 15년의 개발협력 기본 의제나 원칙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협력 사업에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과 실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포용적 성장을 장기적이고 범분야적인 이슈 (cross-cutting issue) 보다 확장된 개념인 ‘포괄 섹터 이슈 (sector-inclusive issue)’ 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은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하는 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내적인 빈곤의 퇴치 및 생산적인 고용의 창출, 보편적 복지에의 접근성과 기회 확보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출물 (output)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닌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영향 (impact)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행정),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고용창출 및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 (공공행정),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보건 및 사회인프라), 산업화 및 기초산업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경제인프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보존 (환경) 등 다양한 섹터별 접근이 결합되어야 포용적 성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다섹터적 (multi-sectoral) 접근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친빈곤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과의 차별점이 ‘고용 기회의 확대와 생산적 고용의 증대’로 보았을 때, 국가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면서 이러한 성장으로부터 오는 소득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사슬을 여러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현재 KOICA의 SDGs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되고 있는 Better Life for Girls와 같이 여아/소녀의 생애주기형 복합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및 소득 수준 향상/재산권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는 것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II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의 실체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남미 지역 내에서도 콜롬비아의 경우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불평등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볼리비아의 경우는 고용에 있어 성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또 벨라루스의 경우 교육면에서의 불평등은 완화되는 편이나, 고용에서의 성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개별 국가 내에서 섹터 간 편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국별 포용적 성장 지원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개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협력 대상국의 주인의식과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바, 수원국이 국내적 불평등의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성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 데이터 확보를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섹터적 접근’의 필요성이 친빈곤적 성장 정의와 포용적 성장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면 그 공통분모로는 수혜자 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빈곤의 감소와 빈곤층 및 소득면 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minority group)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혜자집단을 규정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앞서 IV 장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원국 국내에서 정책적인 우선순위와 수혜자집단의 선정, 이들의 혜택 공유와 정책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포용적 성장은 하나의 주체 혹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와 주체가 함께 맞물려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포용적 파트너십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 수립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포용적 성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러한 포용적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포용적 파트너십의 수혜자뿐 만 아니라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들에게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때, 포용적 파트너십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로 수원국들의 성장 포용성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포용적 파트너십’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으려 기획되었다. 실제 수원국들의 불평등성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계량경제학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점은 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성장과 불평등성, 공적개발원조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의 주제로서 남겨두기로 한다. 또한 다양한 포용적 파트너십의 사례를 특히, 다양한 자원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조된 프로그램들을 후속연구로 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KOICA의 사업 발굴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DB (2012).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Confronting Rising Inequality in Asia,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Adelman, I. and Robinson, S. (1988) 'Income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n H. Chenery and T.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I, Amsterdam: North-Holland.
- AfDB (2012). Briefing Notes for AfDB's Long-Term Strategy-Briefing Note 6: Inclusive Growth Agenda, Tunis: African Development Bank.
- Ahluwalia, M.S. and Chenery, H. (1974a). 'The Economic Framework' in H. Chenery, M.S. Ahluwalia, C.L.G. Bel, J.H. Duloy and R. Jolly (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4b). 'A Model of Redistribution and Growth' in H. Chenery, M.S. Ahluwalia, C.L.G. Bel, J.H. Duloy and R. Jolly (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9-35.
- Ali, I. and Son, H.H. (2007). 'Measuring Inclusive Growth', Asian Development Review, 24(1): 11-31.
- Berg, A. and Ostry, J. (2011). 'Equality and Efficiency: Is there a trade-off between the two or do they go hand in hand?', Finance and Development, 48(3): 12-16.
- Bhalla, S. (2007). 'Inclusive Growth? Focus on Employment', Social Scientist, 35(7/8): 24-43.
- CEPAL, N. (2015).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The next generation of policies for overcoming poverty and reducing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nd the

- Caribbean. Santiago: UN ECLAC. (http://repositorio.cepal.org/bitstream/handle/11362/39101/S1500895_en.pdf;jsessionid=60A472ED2F59C16A1E2BC94626B48632?sequence=1, 검색일: 2015. 12.20).
- Chenery, H., Ahluwalia, M.S., Bell, C.L.G., Duloy, J.H. and Jolly, R. (1974).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gdeviren, H., van der Hoeven, R. and Weeks, J. (2000). 'Redistribution matters: Growth for Poverty Reduction', Employment Paper, No. 2000/10.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Deininger, K. and Squire, L. (1998). 'New Perspectives on Old Issues: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2), 259–87.
- Dollar, D. and Kraay, A. (2002).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7: 195–225.
- Grosse, M., Harttgen, K. and Klasen, S. (2008). 'Measuring Pro-Poor Growth in Non-Income Dimensions', *World Development*, 36(6): 1021–47.
- Habito, C.F. (2009). 'Patterns of Inclusive Growth in Asia: Insights from an Enhanced Growth-Poverty Elasticity Analysis',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45.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Ianchovichina, E. and Lundstrom, S. (2009). 'Inclusive Growth Analytics: Framework and Applic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851. Washington, DC: World Bank.
- Kakwani, N., Khandker, S. and Son, H. H. (2004). 'Pro-poor Growth: Concepts and Measurement with Country Case Studies', IPC-IG Working Paper, No. 1. Brasilia: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 Kakwani, N. and Silber, J. (2008). 'Introduction: Multidimensional Poverty

- Analysis: Conceptual Issues, Empirical Illustr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World Development*, 36(6): 987–91.
- Kakwani, N. and Son, H.H. (2008). *On Assessing Pro-pooriness of Government Programmes: International Comparisons*. New York: UNDP.
- Kakwani, N. and Pernia, E. (2000). 'What is Pro-poor Growth?', *Asian Development Review: Studies of Asian and Pacific Economic Issues*, 18(1)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Kanbur, R. (2000). 'Income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n A.B. Atkinson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Amsterdam: North-Holland.
- Klasen, S. (2010). 'Measuring and Monitoring Inclusive Growth: Multiple Definitions, Open Questions, and Some Constructive Proposals', ADB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No. 12.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Kraay, A. (2004). 'When Is Growth Pro-Poor? Cross-Country Evidence', IMF Working Paper, No. 4–47.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8.
- Li, H. and Zou, H. (1998). 'Inequality is not Harmful for Growth: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3): 318–34.
- Lipton, M. and Ravallion, M. (1995). 'Poverty and policy' in J. Behrman and T.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III. Amsterdam: North-Holland. pp. 2551–657.
- List, G.F. (1841 [1856]). *The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Philadelphia:

- Lippincott.
- Lopez, J.H. (2004). *Pro-poor Growth: A Review of What We Know (and of what we don't know)*. Washington, DC: World Bank.
- McKinley, T. (2010). 'Inclusive Growth Criteria and Indicators: An Inclusive Growth Index for Diagnosis of Country Progress', ADB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No. 14.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Mello, L. de and Dutz, M.A. (eds) (2012). *Promoting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nd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통계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5.12.01.
- Ostry, Jonathan D.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14/02, (available at <http://www.imf.org/external/pubs/ft/sdn/2014/sdn1402.pdf>, 검색일: 2015. 12. 18).
- Ramos, R.A., Ranieri, R. and Lammens, J.W. (2013). 'Mapping Inclusive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PC-IG Working Paper, No. 105. Brasilia: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 Rauniar, G. and Kanbur, R. (2010). *Inclusive Development: Two Papers on Conceptualization, Application, and the ADB Perspective*.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Ravallion, M. (2004). *Pro-poor Growth: A Primer*. Washington, DC: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 _____. (2001).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Looking Beyond Averages', *World Development*, 29(11): 1803-15.
- Ravallion, M. and Chen, S. (2003). 'Measuring Pro-poor Growth', *Economics*

- Letters, 78: 93–99.
- Rostow, W.W. (1959).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History Review*, XII(I): 1–6.
- _____ (1956). ‘The Take-Off Into Self-Sustaine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66(261): 25–8.
- Son, H. H. and Kakwani, N. (2008). ‘Global Estimates of Pro-Poor Growth’, *World Development*, 36(6): 1048–66.
- Stiglitz, J.E. and Squire, L. (1998).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it Possible?’, *Foreign Policy*, 110: 138–51.
- UNDP (각년도).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UNDP.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eeks, J. (2000). *Pro-Poor Growth: Equity and Poverty Reduction*. New York: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UNDP Regional Bureau for Africa.
- White, H. and Anderson, E. (2001). ‘Growth versus Distribution: Does the Pattern of Growth Matter’, *Development Policy Review*, 19(3): 267–89.
- White, W.R. (2012). ‘Policy Debate: How do you make growth more inclusive?’ in L. de Mello and M.A. Dutz (eds), *Promoting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nd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 World Bank (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DEBTDEPT/Resources/468980-1218567884549/WhatIsInclusiveGrowth20081230.pdf>, 검색일: 2015.12.01).
- World Bank 통계 홈페이지. data.worldbank.org/, 검색일: 2015.12.01.

World Economic Forum (2015). Creating New Models : Innov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clusiv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Zepeda, E. (2004). 'Pro-poor Growth: What Is It?,' IPC-IG One Pager, Brasilia: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20-194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발행	행	2015년 12월
발행인	인	김영목
발행처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인	연구개발팀
주소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화	화	031)740-0114
팩스	스	031)740-0655
홈페이지	지	http://www.koica.go.kr
인쇄	쇄	다인스캐치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469-337-7 93320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20-194

ISBN 978-89-6469-337-7 93320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